

[Since 1989]

충북참여연대 토론회

민선 8기 충북도정 2년,
성과와 과제

일시 | 2024년 6월 19일(수) 오후 2시

장소 | 청주시도시재생허브센터 2층 대회의실

주최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주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연구센터

민선8기 충북도정 2년, 성과와 과제

1. 취지

- 2022년 출범한 민선 8기가 만 2년이 경과함. 지난 2년간의 충북도정을 돌아보면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여러 논란과 부정적인 평가 역시 함께 공존함.
- 김영환 충북도지사 취임 후 1호 결재 사업으로 추진하다 한 달여 만에 보류결정을 내린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인 추진으로 내부 공무원과 도민 양쪽 모두의 비판을 받은 '차 없는 충북도청', 양적 관광객 증가에만 집중하며 관람객의 안전과 편의를 외면한 채 편법적인 주차장 추가조성과 푸드트럭 불법운영 등 부작용으로 이어진 청남대 활성화 정책까지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앞서는 정책들이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음.
- 게다가 2023년 7월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역할마저 방기한 재해 재난의 예방과 대응 전반에 허점을 드러낸 중요한 계기이기도 함.
- 이에 민선 8기 반환점을 도는 시기를 맞아 충북도정의 2년을 보다 분석적으로 검토하고 민선 8기 남은 2년 동안 도민을 위한 충북도정을 위해 어떤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지 함께 고민하고 목소리를 모아보고자 함.

2. 일정

- 일시 : 2024년 6월 19일(수) 오후 2시 ~ 4시
- 장소 : 청주도시재생지원센터 2층 대회의실

3. 개요

- * 사회 : **이은희** 교수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발제 : **정상호** 교수 (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 정책연구센터장)

- * 토론 : 가나다순
 - 경제, 지역개발 | **김영배** 청주대학교 경제통상학과 교수
 - 의료, 보건 | **김현식**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환경, 시민 | **박종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 의회 | **박진희** 충북도의회 의원
 - 복지, 여성 | **유영경** 청주YWCA 여성·환경위원장
 - 재난안전, 오송참사 | **이성구** 변호사
 - 문화, 관광 | **한용진** 사)충북민예총 사무처장

4. 기대효과

- 민선8기 충북도정에 대한 분석적 평가 및 향후 개선방향 제시
- 민선8기 충북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확대

민선 8기 충북도정 평가: 실망과 혼선의 2년, 성찰과 소통이 절실한 2년

정상호 (충북참여연대 정책연구센터장 / 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I. 평가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의 지방권력은 매우 강력한 강시장형(strong mayor-council) 의회에 해당된다. 강시장형 의회에서 단체장(도지사과 시장)은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고 광범한 임명권이 부여된다. 단체장은 자신의 참모들의 도움을 받아 예산을 마련하고 관리하며, 행정적 권한의 거의 전부를 영위하고, 부서장들을 임명·해직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반면 약시장형 의회에서 단체장은 선출된 의원들 사이에서 선출된다. 단체장의 임명권은 제한적이며, 일반적으로 시의회가 입법적 권한과 행정적 권한 모두를 소유한다.

하지만, 중앙-지방의 관계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권한과 지위가 매우 제약되어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낮은 재정자립도, 예산 편성 및 인사권의 제약, 조례 제정의 한정된 범위 등 여전히 대한민국은 압도적으로 중앙집권적인 국가이다. 중앙과의 관계에서 지방은 여전히 '을'이지만, 지방 내에서 단체장의 지위는 막강한 '갑'이다. 자치단체의 집행부 수장으로 도지사는 정책추진과 예산배정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지방 관료에 대한 광범위한 인사권을 통해 관료집단을 종속시켜 놓았고 결국 지방정치의 위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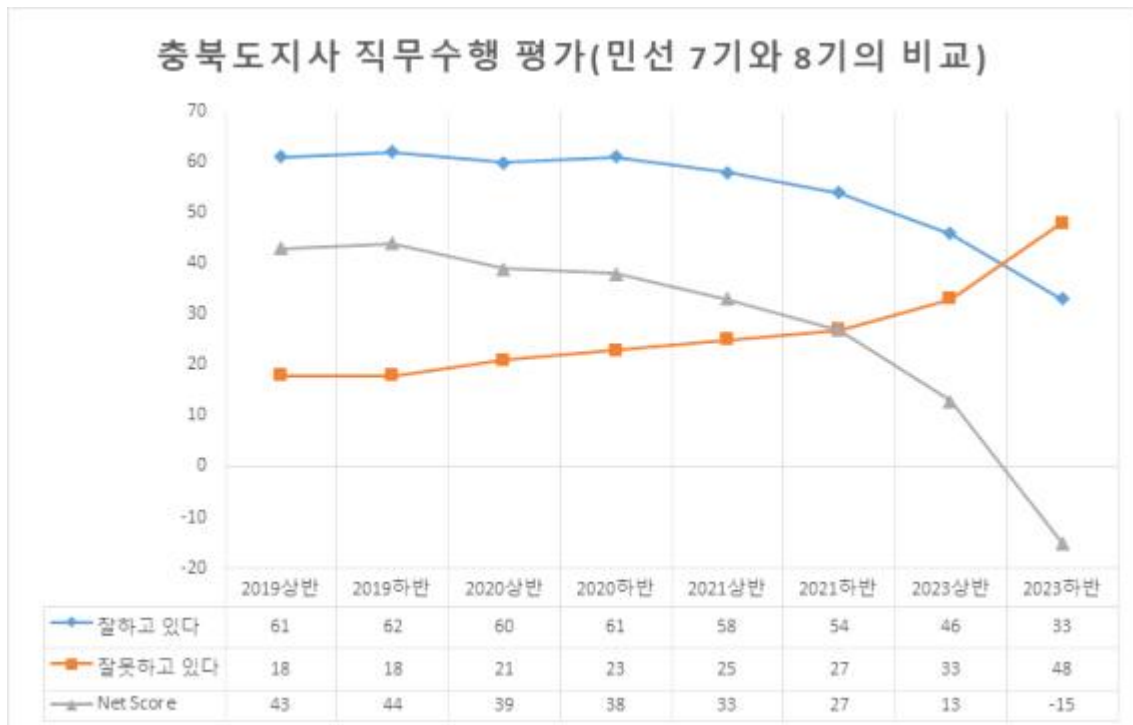
본 연구는 이렇듯 지방정치의 중심에 위치한 도지사의 수행 능력과 리더십을 평가하고자 한다. 지역정치와 지방행정의 구심점인 단체장은 선출직 공직자이기 때문에 도민의 평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번 평가의 취지는 특정 개인에 대한 도민들의 인기나 호불호를 엿보려는 것이 아니라 지난 2년 동안 이룩한 도정의 성취와 한계를 확인하는 데 있다. 또한, 이번 행사를 통해 도정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충청북도의 현안과 비전에 대한 '공론화'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번 발표를 통해 드러난 다양한 평가와 요구를 놓고 지방정치의 주역들인 단체장과 지방의회, 지역 언론과 시민단체들의 생산적 토론을 기대해 본다.

II.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리더십 평가

1. 민선 8기 충북도지사의 2년 평가: 예외 없는 낙제점¹⁾

1) 전임(민선 7기) 도지사와의 비교: 구관이 명관?

<그림 1> 충북도지사 직무 수행 평가



※ 시도지사 직무 평가는 지역별 상황·특수성 고려해 시도 간 비교가 아닌 해당 지역 내 추이 중심으로 봐야 함

- 민선 7기(이시종 지사)에 비해 잘하고 있다(긍정 평가)는 대답은 20-30%가 감소한 반면, 잘 못하고 있다(부정 평가)는 평가는 20-30%가 증가하였음.
- 특히 오송 참사(2023.7.15) 이후 2023년 하반기 평가에서는 부정 평가(48)가 긍정 평가(33)를 압도하였음.
- 주목할 점은 도민들 사이의 부정 평가가 성, 연령, 직업과 무관하게 높게 나타났다는 점임.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다소 앞선 응답군은 보수(44:39), 대통령 직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집단(55:25)뿐이었음.

1) 이하의 자료는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광역자치단체장(민선 8기 시도지사) 직무 수행 평가를 참조하였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한국갤럽(<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406>)을 참조.

<표 1> 충북도지사 직무 수행 평가의 응답자별 구성

충청북도	사례수 (명)	시도지사 직무 수행 평가				Net Score (1)-(2)
		잘하고 있다 (1)	잘못하고 있다 (2)	어느 쪽도 아니다	모름/ 응답거절	
[민선 6기] 2014년 9-12월	422	56%	17%	9%	19%	39
2015년 1-6월	553	57%	17%	7%	19%	40
7-12월	439	56%	21%	6%	17%	35
2016년 1-6월	654	56%	20%	7%	18%	36
7-12월	601	55%	19%	8%	18%	36
2017년 1-6월	655	59%	23%	6%	12%	36
7-12월	661	55%	22%	7%	16%	33
[7기] 2018년 9-12월	445	59%	21%	6%	13%	38
2019년 1-6월	737	61%	18%	7%	15%	43
7-12월	701	62%	18%	5%	15%	44
2020년 1-6월	747	60%	21%	5%	14%	39
7-12월	680	61%	23%	5%	11%	38
2021년 1-6월	729	58%	25%	7%	11%	33
7-12월	727	54%	27%	6%	12%	27
[8기] 2023년 1-6월	702	46%	33%	3%	17%	13
2023년 7-12월	615	33%	48%	5%	14%	-15
성별						
남성	312	30%	53%	6%	12%	-23
여성	303	37%	43%	4%	16%	-6
연령별						
18~29세	96	47%	33%		20%	14
30대	84	35%	44%	2%	19%	-9
40대	105	17%	<u>66%</u>	6%	12%	-49
50대	121	27%	63%	3%	6%	-36
60대	115	31%	53%	8%	8%	-22
70대 이상	95	47%	22%	9%	23%	25
직업별						
농/임/어업	22	-	-	-	-	-
자영업	79	27%	56%	8%	9%	-29
기능노무/서비스	101	24%	57%	6%	13%	-33
사무/관리	183	31%	55%	3%	10%	-24
전업주부	116	43%	36%	4%	18%	7
학생	47	45%	27%		28%	18
무직/은퇴/기타	67	29%	44%	8%	19%	-15
성향별						
보수	190	<u>44%</u>	39%	7%	10%	5
중도	183	31%	54%	3%	12%	-23
진보	154	28%	<u>64%</u>	3%	5%	-36
모름/응답거절	88	25%	26%	8%	42%	-1
대통령						
긍정 평가자	231	55%	25%	8%	11%	30
직무 부정 평가자	335	21%	67%	2%	10%	-46
평소						
많이 있다	145	30%	62%	5%	3%	-32
정치에						
약간 있다	249	30%	54%	5%	11%	-24
관심이						
별로 없다	138	41%	36%	4%	18%	5
전혀 없다/모름	83	35%	25%	5%	35%	10
분기별						
3분기	335	33%	44%	5%	17%	-11
4분기	280	33%	52%	4%	10%	-19

- 민선 5·6·7기 이시종, 8기 김영환 지사

- 30사례 미만은 수치 제시하지 않음.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2023 www.gallup.co.kr

2) 다른 광역단체장과의 비교: 16위와 17위

- 17개 광역단체장 중 Net Score를 기준으로 할 때 2023년 상반기는 16위(13점)였고, 2023년 하반기는 꼴찌를 기록하였음.
- 특히 2023년 하반기는 전체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15)를 기록하였음.

<표 2>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 수행 평가

[민선 8기]	2023년 7~12월				2023년 1~6월		
	잘하고 있다 (1)	잘못하고 있다 (2)	Net Score (1)-(2)	Net Score 증감	잘하고 있다 (1)	잘못하고 있다 (2)	Net Score (1)-(2)
전체 시도 평균	51%	29%	22	(-4)	52%	26%	26
•서울특별시 - 오세훈 (국민의힘)	52%	32%	20	(+6)	50%	36%	14
•부산광역시 - 박형준 (국민의힘)	56%	28%	28	(+1)	55%	28%	27
대구광역시 - 홍준표 (국민의힘)	56%	30%	26	(-8)	59%	25%	34
인천광역시 - 유정복 (국민의힘)	50%	28%	22	(+6)	47%	31%	16
광주광역시 - 강기정 (민주당)	45%	36%	9	(-13)	50%	28%	22
대전광역시 - 이장우 (국민의힘)	47%	34%	13	(-1)	47%	33%	14
울산광역시 - 김두겸 (국민의힘)	53%	30%	23	(-5)	54%	26%	28
세종특별자치시 - 최민호 (국민의힘)	-	-	-	-	-	-	-
경기도 - 김동연 (민주당)	58%	17%	41	(+1)	57%	17%	40
강원특별자치도 - 김진태 (국민의힘)	42%	38%	4	(+2)	41%	39%	2
충청북도 - 김영환 (국민의힘)	33%	48%	-15	(-28)	46%	33%	13
충청남도 - 김태흠 (국민의힘)	52%	27%	25	(-1)	49%	23%	26
전라북도 - 김관영 (민주당)	51%	31%	20	(-13)	54%	21%	33
•전라남도 - 김영록 (민주당)	60%	18%	42	(-6)	62%	14%	48
•경상북도 - 이철우 (국민의힘)	62%	18%	44	(+3)	61%	20%	41
경상남도 - 박완수 (국민의힘)	49%	24%	25	(-3)	50%	22%	28
제주특별자치도 - 오영훈 (민주당)	52%	30%	22	(-10)	56%	24%	32

2) 리얼미터 2024년 4월 광역자치단체장 평가: 항상 하위권

<표 3> 리얼미터 2024년 4월 광역자치단체장 평가

순위	긍정 평가 일반 지수(%)	정당 지표 상대 지수 ²⁾	지지 확대 지수 ³⁾ ²
1	김영록 전북지사 65.9	오세훈 서울시장 134.1점	김동연 경기지사 133.6점
2	김동연 경기도지사 65.6	김태흠 충남지사 128.9점	김진태 강원지사 100.4점
3	김관영 전북지사 62.8	김동연 경기도지사 124.2점	김태흠 충남지사 97.8점
4	이철우 경북지사 59.3	이장우 대전시장 114.8점	이장우 대전시장 92.2점
5	김진태 강원지사 54.3	김두겸 울산시장 111.5점	오세훈 서울시장 87.1점
6	김태흠 충남지사 52.7	박완수 경남지사 109.9점	김영록 전남지사 87.1점
7	김두겸 울산시장 51.5	유정복 인천시장 109.1점	김두겸 울산시장 86.1점
8	오세훈 서울시장 51.5	김진태 강원지사 109.0점	유정복 인천시장 85.7점
9	박완수 경남지사 49.9	이철우 경북지사 105.1점	오영훈 제주지사 81.3점
10	홍준표 대구시장 47.8	최민호 세종시장 104.1점	최민호 세종시장 81.1점

출처: <http://www.realmeter.net/wp-content/uploads/2024/05/>

※ 1~10위 순위만 공개, 11위 이하 중하위권은 비공개(2023년 5월 이후).

- 민선 8기(2022.7) 이후 리얼미터는 광역자치단체장 평가를 계속 수행하고 있으나 충북 도지사는 늘 10위 권 밖인 하위권에 있어 정확한 지수를 확인할 수 없었음.

2) 자치단체장의 직무수행 평가를 단체장이 소속된 지역의 보수·진보 정당 지지층 대비 어느 정도 수준에 위치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비교지수가 100을 상회하면 해당 지역의 보수·진보 정당 지지층에 비해 지지층이 많고, 100을 미달하면 지지층이 적음을 의미한다.

3) 여야 간 정치적 갈등 수준이 높거나 여야 지지층의 규모가 비슷할 때 자치단체장이 직무수행을 잘 하고 있더라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어려운 경향이 있다. 이러한 긍정평가로 측정하는 지지도의 한계를 고려하여 자치단체장의 임기 시작시점의 지지율인 선거득표율을 기준으로 해당 월의 긍정평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한 정도를 비율로 나타낸 것으로써, 자치단체장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지지층을 어느 정도로 확대했거나 잃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지지확대지수가 100을 상회하면 임기 초에 비해 지지층을 확대했고, 100을 미달하면 지지층을 잃었음을 의미한다.

3) 지역 언론의 평가: '김영환 리스크'라는 신조어의 등장

(1) 1년만의 평가의 하락(KBS 여론조사)



	긍정 평가 이유	부정 평가 이유
202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추진 23.7 의료비 후불제 등 현금성 복지공약 17.6 집무실 축소·SNS 소통 강화 14.4 무상급식 단가 인상 합의 12.2 차 없는 도청 추진 7.8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 6.0 세계무예마스터십 지원 중단 4.1 인사 및 조직 개편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비 후불제 등 현금성 복지공약 28.1 차 없는 도청 추진 13.7 집무실 축소·SNS 소통 강화 9.2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추진 7.3 인사 및 조직 개편 6.8 무상급식 단가 인상 합의 6.6 세계무예마스터십 지원 중단 6.4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 1.8
2023.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민과의 소통 능력 29 중앙부처와의 긍정적 관계 20 민생 현안 해결 17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 8 공약·정책 실천 8 인물에 대한 호감 4 기타 3 모름/무응답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생 현안 해결 30 구설과 개인 신상 문제 27 도민과의 소통 부족 22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 부재 5 공약·정책 실천 부족 5 중앙부처와의 부정적 관계 2 기타 4 모름/무응답 5

○ 함의

- 민생현안 해결 능력(중부내륙지원특별법 추진의 정체/ 의료제 후불제 등 복지정책의 지연)에 대한 회의의 증가
- 소통 부족(차 없는 도청 추진, 인사 및 조직 개편)이 일관되게 지적.
- 2년차에 들어 연이은 구설과 개인 신상 문제(주민소환을 초래)의 부각.

(2) 지역 언론에 비쳐진 충북도지사

<p>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 ;</p> <p>충북 생활 만족도 전국 2위...김영환 지사 긍정평가는 순위권 밖 2024. 4. 17. — (경주=뉴스1) 박재원 기자 충북지역 생활 만족도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월 26일~3월 28일...</p> <p>충청타임즈 http://www.cctimes.kr/news/articleView ;</p> <p>'반등 기미 없는' 김영환 충북지사 직무평가 2024. 2. 18. — 김영환 충북지사가 오히려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8개월째 10위권내 진입을 못하고 있다 반면 김택를 충남지사의 이장우...</p> <p>충북뉴스 https://www.cbnews.kr/news/articleView ;</p> <p>김영환 충북지사, 직무수행 평가 전국 최하위 2024. 1. 5. — (충북뉴스 국군만 기자) 김영환 충북지사가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직무수행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5월 한국갤럽이 공개한 2023...</p> <p>충청일보 https://www.ccbdailynews.com/news/articleView ;</p> <p>김영환 충북지사, 직무수행 긍정평가 8개월 연속 10위권 밖 2024. 1. 14. —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 8개월 연속 10위권 밖에 머물고 있다 14일 리얼미터의 2023년 12월 광역단체장 긍정...</p> <p>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11ab/View/zt_pg ;</p> <p>김영환 충북지사 직무수행 부정평가 48%... 긍정보다 높아 2024. 1. 5. — 여론조사전문업체 '한국갤럽'이 지난해 7월~12월 전국 16개 시도(세종시 제외)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김영환(국민의힘) 충북지사...</p>	<p>충청매일 https://www.ccbn.co.kr/news/articleView ;</p> <p>[사설] 김영환 충북지사가 가야 할 길 2024. 1. 8. — [충청매일]충북 정치에는 윗몸 김영환 리스크 라는 말이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취임 이후 '산불 솔자리' 논란과 '친일파 발언' 오승 지휘차도...</p> <p>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view ;</p> <p>[여론조사] 충북도지사 역점 사업 평가, 희비 엇갈려 2024. 1. 4. — [평가] 김영환 지사에 이어 민선 8기 충청북도의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목...</p> <p>충청리뷰 https://www.ccreview.co.kr/news/articleView ;</p> <p>김영환 지사 직무수행 평가 반전, 긍정→부정 2024. 1. 17. —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지역 민심이 부정적으로 돌아섰다 최근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영환 지사에...</p> <p>부스앤뉴스 https://www.busanews.com/article ;</p> <p>[한국갤럽] 광역단체장 직무평가 꼴찌는 김영환 충북지사 2024. 1. 5. — 5월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해 7~12월 전국 2만 1천 30명을 대상으로 17명의 광역 광역단체장들에 대한 직무수행 평가를 한 결과 평균 긍정률은 51%...</p> <p>충청매일 https://www.ccbn.co.kr/news/articleView ;</p> <p>'반등 기미 없는' 김영환 충북지사 직무수행 평가 ... 2024. 1. 14. — [충청매일 최정덕 기자] 김영환 충북지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도민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지난해 중부내륙특별발전 대내외적으로 불복합한 민선 8기...</p>
---	---

Ⅲ. 공약과 정책 평가

1. 충청북도의 자체 공약 이행 평가: 양호

- 민선 8기 충청북도지사 공약의 2023년 말까지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총 100개 공약 중에 완료 공약 2개, 이행 후 계속추진 공약 6개 등 8.00%(8개)이 완료·이행 공약으로 분류되었다. 정상 추진은 81개로 확인되었다.
- 완료 이행된 공약은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충북형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

구분	완료	이행 후 계속추진	정상 추진	일부 추진	보류	폐기	기타	합계
충청북도	2	6	81	9	0	0	2	100

※ 이행후 계속추진은 매년 완료되는 공약으로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정상 추진되고 있는 공약임

1) 지연(부진) 공약 (9건)⁴⁾

- 100대 공약 중 지연(부진)으로 분류된 공약은 9건임(9%). 분야별로는 경제(1건), 문화(3건), 환경(4건), 복지(1건)로 나타났다.

13. 청년 잡(JOB) 앱으로 상시 취업고용 현황 실시간 제공
28. 복합문화공간 조성
34. 종합운동장(청주) 리모델링으로 스포츠·문화 복합 콤플렉스 조성
37. 권역별 대중골프장 건설
41. 미호강 맑은물 사업 추진
48.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1구 1소방서 설치
53. 충북소방학교 건립
60. 지역산업 특화 전문과학관 건립
68. 어르신 감사효도비 신설

2) 정상 추진 (91건)

4) 이하의 내용은 충청북도청 도지사 (100대) 공약 세부추진상황을 참조하였음.

<https://www.chungbuk.go.kr/governor/contents.do?key=4419>.

2. 2024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빨간불이 켜진 충북

- 종합 평가 결과, SA등급(총점 평점 83점 이상)을 받은 시도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9곳이었다(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를 위한 세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대전광역시는 이번 평가에서 제외).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종합) 5]

등급	83점 이상 시도
SA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는 평가에서 제외하였음.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분야별)]

공약 이행 완료 분야		2023년 목표 달성 분야	
등급	65점 이상 시도	등급	97점 이상 시도
SA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SA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주민 소통 분야			
등급	90점 이상 시도		
SA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 분야별 평가 결과, 공약이행완료 분야에서 SA등급(평점 65점 이상)을 받은 시도는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4곳이었다. 2023년 목표달성 분야에서 SA등급(평점 97점 이상)을 받은 시도는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6곳이었다. 주민소통 분야에서 SA등급(평점 90점 이상)을 받은 곳은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5곳이었다.

5) 출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2024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발표” http://manifesto.or.kr/?page_id=4240

① 재정 확보율: 평균 수준

슬로건	충북, 대한민국 중심에 서다	
공약 총괄	공약관리	5대 분야, 100개 사업
	총 소요재정	33,142,630백만 원
	확보재정	6,212,118백만 원(18.74%)
	임기 내 확보계획	11,346,004백만 원
	임기 내 확보재정	4,703,626백만 원(41.46%)
평가결과	-	

- 종합평가 결과, 충청북도는 전체 계획총계에 대한 재정 확보율은 18.74%로 분석, 2023년도 목표 달성률은 89.00%로 나타나 자체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충북의 당초 2022년 전체 재정 계획과 구성 비율을 비교해 보면, 시도비 비율은 13.65%p, 시군구비 비율은 13.56%p, 민간 등 기타 비율은 13.66%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국비 비율(45.6→36.5)은 9.05%p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	전체 계획총계	확보 비율	전체 확보 내역 (단위: 백만 원)				
			총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민간/기타
서울특별시	49,700,151	27.50%	13,668,224	1,911,472	6,198,042	350,632	5,208,078
부산광역시	54,642,207	8.61%	4,706,851	1,828,233	1,027,155	214,771	1,636,692
대구광역시	33,842,341	4.09%	1,384,920	546,415	779,792	2,020	56,693
인천광역시	48,634,497	13.19%	6,414,990	2,152,771	2,925,510	323,460	1,013,249
광주광역시	15,758,608	16.08%	2,533,994	695,854	1,353,286	87,896	396,959
대전광역시	-	-	-	-	-	-	-
울산광역시	13,044,290	40.25%	5,250,789	3,144,272	442,206	40,687	1,623,625
세종특별자치시	1,420,870	10.69%	151,835	35,953	115,418	-	464
경기도	33,779,881	40.34%	13,627,865	2,314,713	4,239,019	4,510,068	2,564,065
강원특별자치도	50,875,399	15.37%	7,820,835	4,275,268	1,776,947	1,262,979	505,642
충청북도	33,142,630	18.74%	6,212,118	1,955,390	1,408,009	1,375,007	1,473,712
충청남도	44,715,664	13.24%	5,918,949	2,129,337	1,178,689	1,571,378	1,039,545
전북특별자치도	16,029,491	33.40%	5,354,517	3,069,313	614,192	627,566	1,043,446
전라남도	56,212,736	20.08%	11,287,928	4,689,816	1,099,861	1,423,291	4,074,960
경상북도	52,077,840	7.41%	3,860,484	1,503,717	1,146,531	954,050	256,186
경상남도	22,694,835	16.17%	3,668,838	1,804,355	780,085	911,030	173,368
제주특별자치도	12,010,324	44.80%	5,380,303	1,855,253	2,781,509	-	743,541
총계	538,581,763	18.06%	97,243,440	33,912,132	27,866,250	13,654,834	21,810,225

② 문제점: 주요 대형 사업의 낮은 재정 확보율

- 재원 소요 규모가 가장 큰 10개 공약의 재정 확보율은 15.94%에 불과.
- 조 단위의 재정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확보재정이 없는 공약사업 중 재원 소요 규모가 가장 큰 30개 사업 현황(충북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3.3%에 달함).

순번	공약명	전체 계획총계 (백만 원)	전체 확보총계
8	충북 동부축(백두대간연계) 고속도로 건설	4,400,000	-
10	청주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4,281,000	-
11	남부권 지역 활력을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 영동~진천(남북6축)고속도로건설	3,823,100	-
14	남부권 지역 활력을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 보령~대전~보은고속도로건설	3,153,000	-

- 재정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확보재정이 없는 150개 사업 중 충북의 현황
- 충북의 비율(20건)은 13.3%에 달함.

순번	공약명	전체 계획총계 (백만 원)	임기 내 계획총계	전체 확보총계
89	충북일자리지원센터 기능 강화	1,600	1,600	-
90	AI, 이차전지, 수소경제 생태계 등 신산업 육성-신산업 육성(이차전지)	400,000	191,000	-
91	종합운동장(청주) 리모델링으로 스포츠문화 복합 콤플렉스 조성	40,000	40,000	-
92	탄소중립 역량 집적화 거점 조성	100,000	40,000	-
93	방사광가속기 주변 생태에너지공원 조성	20,000	13,000	-
94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1구 1소방서설치	36,000	36,000	-
95	소방산업진흥기관 유치	29,200	12,600	-
96	충북소방학교 건립	8,900	8,900	-
97	지역산업 특화 전문과학관 건립	25,000	24,000	-
98	충북 권역재활병원 지정·운영	20,000	20,000	-
99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설립 추진	408,000	126,400	-
100	청주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4,281,000	131,800	-
101	중부권 교류 증대를 위한 광역교통망 완성 -중부고속도로(증평~호법)확장	1,125,500	3,000	-
102	중부권 교류 증대를 위한 광역교통망 완성(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연결도로건설)	180,000	42,100	-
103	중부권 교류 증대를 위한 광역교통망 완성(오송~오창(방사광가속기)연결도로건설)	333,000	1,000	-
104	남부권 지역 활력을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영동~진천(남북6축)고속도로건설)	3,823,100	54,000	-
105	남부권 지역 활력을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보령~대전~보은고속도로건설)	3,153,000	0	-
106	충북 동부축(백두대간연계) 고속도로 건설	4,400,000	0	-
107	오송 K-트레인 클러스터 구축	500,000	220,900	-
108	도 공공기관 분산배치: 공동직업훈련원남부설치	1,600	1,100	-

V. 결론 : 도지사가 바뀌어야 한다!

앞서 강조하였던 것처럼 이번 발표의 목적은 도민들의 도정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충청북도의 현안과 비전에 대한 ‘공론화’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번 결과에 대한 도 차원의 진지하고도 적극적인 수렴 의지가 필요하다. 충북 도정의 전면적 전환을 위한 몇 가지 과제를 제안하는 것으로 결론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1. **김영환 지사는 민선 8기의 도정 2년을 맞아 먼저 진솔한 반성과 쇄신의 각오를 도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전국적 여론조사이든, 우리 지역의 평가이든 김영환 지사에 대한 지난 2년의 평가는 거의 불신임 수준에 가깝다. 잦은 말실수, 선부른 정책과 인사의 남발 등으로 인한 그간의 혼선과 실책을 야당의 공세나 홍보의 부족 탓으로 돌려선 안 된다. 도지사가 먼저 그간의 다양한 비판 의견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도정에 임할 것을 도민과 언론에 밝히는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절차와 자리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2. **도정 쇄신의 출발은 오송 참사 1주년을 맞아 도지사가 직접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있다.** 도지사는 오송 참사 관련 유가족 및 시민단체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와 소통에 나서야 한다.
3. **도민의 관심이 큰 민생 공약 이행에 역점을 두으로써 책임정치와 생활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부내륙특별법의 조속한 개정, 충북 레이크 파크 르네상스'의 계획적 이행(2030년까지 9조 2,000억 투입),⁶⁾ 충북 동부축(백두대간연계) 고속도로 건설(4조 4천억) 등의 재정 조달과 입법화에 도정의 역량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4. **지금 충북도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도민과의 소통의 복원이다.** 집무실의 축소와 SNS 활성화는 소통의 기능적 수단이지만 본질적 요소는 아니다. 그렇게 일방적인 독선 행정에 대해 많은 비판을 들어왔지만 도청 주변의 100년 그루 나무를 훼손하는 것을 보면 크게 바뀔 것 같지가 않다.⁷⁾ 다행이 뒤늦게나마 도민 배심원단을 구성하여 공약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충북뉴스, 2024.05.17).⁸⁾
5. **충청-대전-세종 메가시티 등 지역의 균형 발전과 농촌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6) 충청일보, 2023.3.15.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2123>.

7) 4년짜리 단체장이 100살 나무 뽑아...‘과포’ 같은 충북도청(한겨레 2024.6.11.).

8) 도민 배심원단의 구성 중 자발적 공모를 통한 참여자(16명)보다 시군 추천 배심원(22명)이 많아 독립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비판의 소지가 있다.

충북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구상이 필요하다. 최근 대구경북(행정)통합이 쟁점으로 부상하였고, ‘부산·울산·경남 초광역 특별지방자치단체’(메가시티)가 22대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발의되면서 메가시티 구축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국민일보 2024.6.10.). 그간 충북은 도지사의 소모적인 구설과 언행으로 거시적인 정책 담론과 청사진을 둘러싼 생산적인 논의가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였다. 민선 8기의 전환점이 되는 이 시점에서 논의가 중단되었던 ‘충청권 메가시티(충청지방정부연합)’의 구체적 실현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6. **도정 차원에서 야당과의 거버넌스 수립이 절실하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22대 총선을 계기로 충청북도의 정치 지형은 여소야대의 분점 정부 상황이 되었다. 충북의 현안 사업인 중부내륙특별법의 조속한 개정, 충북 3대 파크 조성, 충북 동부축(백두대간연계) 고속도로 건설, 충청-대전-세종 메가시티 등의 재정 조달과 입법화에 야당 소속 국회의원과 협력의 필요성이 있다. 야당 소속 시의회-도의회-국회와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체계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

지 정 토 론

- 김영배 청주대학교 경제통상학과 교수
김헌식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박종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박진희 충북도의회 의원
유영경 청주YWCA 여성·환경위원장
이성구 변호사
한용진 사)충북민예총 사무처장
-

충북도정 2년의 성과와 과제- 재난안전 예방 관련

이성구 (변호사)

1. 공약사항 이행여부

가. 중대재해로부터 안전한 일터 조성 지원사업

- 내용 - 22년부터 24년까지 예산 투자계획 8억 원(도비 100%,) 대비 투자액 확보 6억 원 확보
- 성과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설명 및 세미나, 중대재해 방지 컨설팅 - 참여기업 52개사
- 평가 - 현장에 찾아가는 서비스로 직접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의 전환 필요, 예산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 중대재해 발생비율이 높은 취약 업체 집중 필요- 지방노동청 및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의 통계 및 자문 반영, 연계 대응 필요

나. 도민안전 확보를 위한 1구 1소방서 설치

- 내용 - 서원구, 청원구 일원
- 성과 - 예산투자계획 360억 원, 현재 투자액 확보 0원, 부지 미선정 및 재정 마련 어려움
- 평가 - 실현가능한 방안 마련 수정 필요

다. 재산안전 관련 체험인프라 및 프로그램 확대

- 내용 - 스마트 민방위 실전 훈련장 구축, 찾아가는 안전체험 마당 운영,
- 성과 - 예산투자계획 140억 원, 투자액 확보 8.8억 원
스마트 민방위 실전 훈련장 2023년 정부예산 확보 미반영
- 평가 - 체험 위주 실질적인 체험 위주 재난 안전 교육 지속적 추진 필요

2. 오송참사 관련 (시민진상조사 보고서 참조)

2023. 7. 15. 14명 사망 및 16명 상해 발생

가. 재난 대비 체제가 제대로 가동하지 않음.

충북도 지하차도 관리 대상에 오창, 마송, 궁평2, 목방- 모두 침수우려 취약도로로 지정되어 있음. 2023. 5월에 충북도는 행정안전부에 궁평2지하차도 등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을 위한 예산지원을 요청- 그러나 2023년 여름 집중호우 시까지 자동차단시설 설치 못했음.

충북도는 '행정안전부 선정 재난관리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을 정도로 다양한 재난관리 인프라를 구축해 왔음, 참사 전인 2023년 4월, 100mm 이상의 집중호우에 대비해 충청북도·충북경찰청·충북소방본부 등이 합동으로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

그러나 충청북도의 자체평가인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결과보고서'에서도 '토론훈련 시 주재자의 주도적인 회의진행으로 협업부서, 유관기관 간 활발한 토의 다소 부족'하였고 '현장훈련 시 통합지원본부 각 반별 역할 수행 및 점검 미흡'하였다고 문제점을 시인하고 있음

(충청북도 조직 간) 부서 간 재난관리 정책연계를 위한 긴밀한 소통훈련 필요 충청북도의 물관리 부서와 재난대응 부서 간의 정책연계에 따른 소통과정이 부족, 향후 도민에 대한 대피와 통제와 같은 재난대응체계를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우선 두 부서 간의 긴밀한 소통훈련이 필요함, 재난대응부서 근무의 기피 및 재난대응 인력의 교체로 인한 경험전수의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충청북도 물관리 부서와 재난대응 부서 간의 재난대응 훈련이 특성화되어야 함

(충청북도와 중앙정부 간) 참사 이후 대책에 대한 점검 및 훈련체계 필요, 궁평 제2지하차도 참사에서 재난발생 시 의사결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충청북도와 중앙정부 간의 기본적인 재난협업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사를 겪었음에도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산불을 주제로 한 훈련이 시행되었기에 피해자 유가족 비롯한 많은 도민에게 형식적인 훈련으로 비추어졌음,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이외에도 오송 참사는 중앙부처와 충청북도의 종합적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협업을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정기적인 점검훈련이 필요함

(충청북도와 유관기관 간) 상호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정 공식화 필요, 충청북도와 유관기관 간 기존에 구축된 재난관리 네트워크가 있지만 오송 참사에서 잘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보공유시스템의 문제로 파악할 수 있음, 기관 간 상호업무와 자원에 대한 정보를 원활하게 공유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정보공유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사전 재난훈련이 동반된다면 재난 발생 시 업무의 중복과 미루기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음

홍수주의보 발령 시점에 119 소방본부를 통해 시민신고가 접수되었으나 충북도 재대본은 모르고 있는 상태였음.

나. 피해자 지원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피해자 지원 및 대응 관련, 충북도 매뉴얼 상으로는 사망자의 인적사항, 안치장소(병원 또는 임시안치실 등)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장례지원반장이 게시판에 게시하며 그 정보를 재대본, 담당과, 경찰청, 소방본부 등과 공유하고 교차 검증하도록 되어 있음. 사망자 인적사항에 대한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보호자에게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것으로 봐서는 파악된 현황으로 유가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음

또한 서식에 따라 사상자 현황, 사상자 조치상황, 사상자 이송현황 등을 정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유족들은 현장과 병원을 뛰어다니며 확인했어야 했음

생존자 지원을 위한 행동 매뉴얼 부존재, 충북도 매뉴얼은 장애등급을 받을 만큼 부상이 크거나 목숨을 잃어야만 사람에게 대한 피해보상이 이뤄지는 상황, 트라우마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지만 장애등급이 나오지 않으면 어떤 보상도 어려운 상황임

다. 책임 회피 논란

분명한 사고원인(무책임한 제방 철거와 관리 부실)이 있음에도 엉뚱한 호도와 정쟁으로 이어지면서 진지한 사고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으로 이어지지 못함

오송 참사를 야기한 홍수의 원인에 대한 조사 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음. 이는 원인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야기했고, 시행착오를 막는 제도 개선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여지가 다분하여 경영책임자인 도지사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⁹⁾

9) 법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법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④ 제1항 제1호·제4호 및 제2항 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제10조(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별 제9조제2항 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가. 법 제9조제2항 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

나. 제4호에 따라 수립된 안전계획의 이행

다.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가. 법 제9조제2항 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유지와 안전점검 등의 실시

나. 제4호에 따라 수립된 안전계획의 이행

다.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법 제9조제2항 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계획하여 수행되도록 할 것

4.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연 1회 이상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충실히 이행하도록 할 것. 다만,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철도운영자가 「철도안전법」 제6조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경우로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그 수립 여부 및 내용을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는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나.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와 공중교통수단의 점검·정비(점검·정비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다.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6. 제5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할 것. 다만, 철도운영자가 「철도안전법」 제7조에 따라 비상대응계획을 포함한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시행하거나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안전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위기대응계획을 포함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용한 경우로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그 수립 여부 및 내용을 직접 점검하거나 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 해당 사항의 신고·조치요구, 이용 제한, 보수·보강 등 그 개선에 관한 사항

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상자 등에 대한 긴급구조조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위험표지 설치 등 추가 피해방지 조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신고와 원인 조사에 따른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라. 공중교통수단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의 제1종시설물에서 비상상황이나 위급상황 발생 시 대피훈련에 관한 사항

8.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

받을 것

- 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 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대통령령 제11조(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9조제2항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2항 제4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나 공중교통수단의 시설 및 설비를 정비·점검하는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이수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등 교육 실시를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경제-지역발전 부문 : 양적 성과 속 질적 과제

김영배(충북참여연대 정책연구센터 위원 / 청주대학교 경제통상학과 교수)

1. 충북 주요 경제 지표

-기준 : 통계청(2023). 2022년 지역소득(잠정), 2023년 12월 22일 공표

-출처 : 설영훈, 이유환(2024.01.04.). 2022년 GRDP로 살펴본 충북 경제, 충북연구원, 충북포커스-220호.

1) 2022년 충북 GRDP, 전국 9위

- 충북의 2022년 실질 GRDP(잠정치)는 73.6조 원



<그림 1> 전국 17개 시도별 실질 GRDP 현황(2022년)

- 전국 대비 경제규모 추이 : 전국 GDP 대비 충북 비중은 2022년 3.73%(9위) 차지, 2010년 3%대 진입 이후 확대 지속되다가 2019년~2020년 간 횡보하였으나, 최근 다시 확대.



<그림 2> 충북의 경제규모 및 전국비중 추이(2010-2022)

2) 충북 GRDP 성장률(2022년), 전국 4위

- 2022년 충북 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4.5%, 전국 4위로 전국을 상회하는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21년에 비해 1.9% 감소했으며 순위는 2위에서 4위로 하락.
- 충북의 경제성장률(YoY) : '18년(6.3%, 1위) → '19년(1.7%, 12위) → '20년(-1.5%, 9위) → '21년(6.9%, 2위) → '22년(4.5%, 4위) / [전국(2.6%)]

<표1>전국 17개 시도별 실질 GRDP 및 경제성장률 현황(2018-2022)

(단위 : 조원 %,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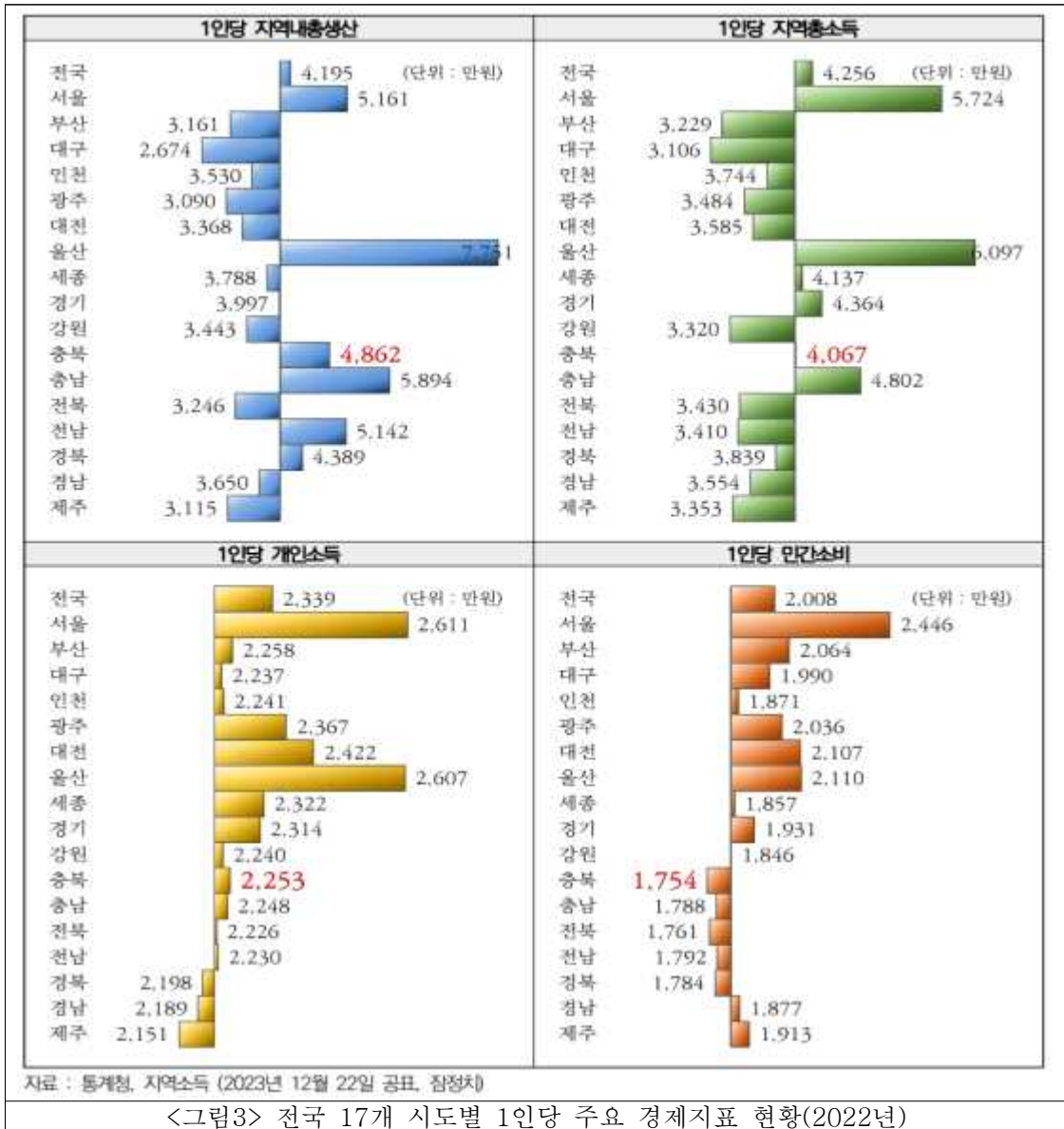
지역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중	경제성장률			
							YoY		CAGR	
전국	1,814.1	1,854.4	1,842.4	1,922.1	1,972.4	100.00	2.6	순위	2.1	순위
서울	403.6	414.1	417.6	431.7	438.5	22.23	1.6	15	2.1	8
부산	86.9	89.1	86.0	87.6	89.9	4.56	2.6	9	0.9	14
대구	54.0	54.8	53.7	56.0	57.0	2.89	1.7	12	1.4	11
인천	86.4	88.0	84.9	90.3	95.7	4.85	6.0	1	2.6	5
광주	38.2	39.6	39.5	41.3	41.9	2.13	1.7	14	2.4	6
대전	39.1	40.7	41.2	42.5	44.4	2.25	4.5	5	3.2	3
울산	71.3	72.0	67.1	69.5	69.2	3.51	-0.5	16	-0.8	17
세종	10.4	11.1	11.6	12.5	12.9	0.65	3.3	7	5.5	1
경기	451.9	462.3	470.0	498.4	516.4	26.18	3.6	6	3.4	2
강원	44.6	46.1	44.8	46.8	48.2	2.44	3.0	8	2.0	9
충북	65.8	66.9	65.9	70.4	73.6	3.73	4.5	4	2.8	4
충남	110.9	112.3	112.8	118.5	121.4	6.16	2.5	10	2.3	7
전북	48.4	49.5	49.1	50.6	51.7	2.62	2.1	11	1.7	10
전남	72.9	74.6	75.0	77.0	75.5	3.83	-1.9	17	0.9	13
경북	103.1	104.4	101.4	105.2	107.1	5.43	1.7	13	0.9	12
경남	107.2	109.4	103.4	105.4	110.3	5.59	4.6	2	0.7	15
제주	19.0	19.2	18.0	18.2	19.0	0.96	4.6	3	0.0	16

주 : GRDP는 2015년 기준년가격 실질 지역내총생산, 비중은 2022년 기준 전국 GDP대비 GRDP 점유율, YoY는 2021년 대비 2022년의 증감률, CAGR은 최근 5년(2018년-2022년) 간의 연평균 증감률임
 자료 : 통계청, 지역소득 (2023년 12월 22일 공표, 잠정치)

3) 충북 1인당 주요 경제지표(2022년)

- **충북 1인당 지역 내 총생산(GRDP), 전국 5위** : 4,862만 원으로 전국평균(4,195만 원)의 115.9%(전국 5위), 전년대비 5.4%(전국 5위), 최근 5년 간 연평균 3.1%(전국 10위) 증가
- **충북 1인당 개인소득, 전국 8위** : 2,253만 원으로 전국평균(2,339만 원)의 96.3%(전국 8위), 전년대비 7.2%(전국 5위), 최근 5년 간 연평균 5.1%(전국 4위) 각각 증가, **가구소득의 경우 6,089만 원으로 전국 9위**
- **충북 1인당 민간소비, 전국 17위** : 1,754만 원으로 전국평균(2,008만 원)의 87.3%(전국 17위), 전년대비 9.0%(전국 9위), 최근 5년 간 연평균 3.0%(전국

13위) 각각 증가



4) 충북 1인당 민간소비(2021년 기준), 전국 17위

자료: 설영훈(2023). 충북의 민간소비 진단, 충북연구원, 충북포커스 제216호.
 충청북도(2023). 충북경제 GRDP 100조 원 시대 도약 전략 수립: 충북경제진단.

- 충북의 1인당 민간소비는 1,610만 원에 불과하여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였으며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4,580만 원으로 전국 5위 수준임
- 1인당 국내소비지출액은 1,455만 원으로 전국(1,639만 원)의 88.7% 수준임
- 지출목적별로는 특히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품, 임료 및 수도광열, 기타, 음식·숙

박 등에 대한 소비가 저조

- 충북의 1인당 소비지출은 2015년 이후 연평균 1.4%씩 증가하고는 있으나, 전국 평균(1.7%)을 0.3%p 하회하는 수준임



<그림4> 전국 17개 시도별 1인당 민간소비 현황(2021년)

자료: 충청북도(2023). 충북경제 GRDP 100조원 시대 도약 전략수립: 충북경제진단.

- 충북의 평균소비성향(=민간소비/개인소득)은 2011년 93.3%에 달했으나 하락세를 지속하며 2021년 기준 76.4%(전국평균 83.0%)로 전국 16위 수준



<그림5> 전국 17개 시도별 1인당 민간소비 현황(2021년)

자료: 충청북도(2023). 충북경제 GRDP 100조원 시대 도약 전략수립: 충북경제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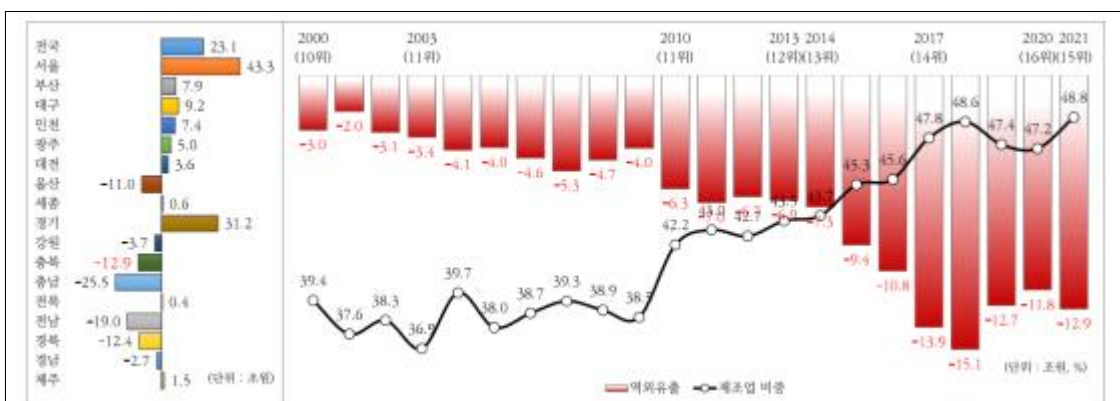
5) 충북 고용 현황(2022년 기준)

- 경제활동참가율 : 66.5% 전국 3위

- 고용률 : 22년 71.1%(전국 3위), 23년 3월 61.1%(7위), 24년 3월 65.3(3위)이며 여성 고용률은 22년 63.4%로 남성(78.1%) 대비 저조
- 실업률 : 2.5%, 전국 7위
- 취업자 수 : 92.6만 명, 전국의 3.3% 비중
- 상용근로자 비중(양질의 일자리) : 52.2%, 전국 55.9%를 3.7%p 하회, 핵심 노동층인 30-49세 취업자 수 감소세
-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2021년 기준) : 331.3만 원, 전국 11위, 전국(358.2만 원)의 92.5%
- 근로시간 전국 3위: 23년도 166.3시간(전국 5위)으로 19년 172.4시간(3위) 대비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

6)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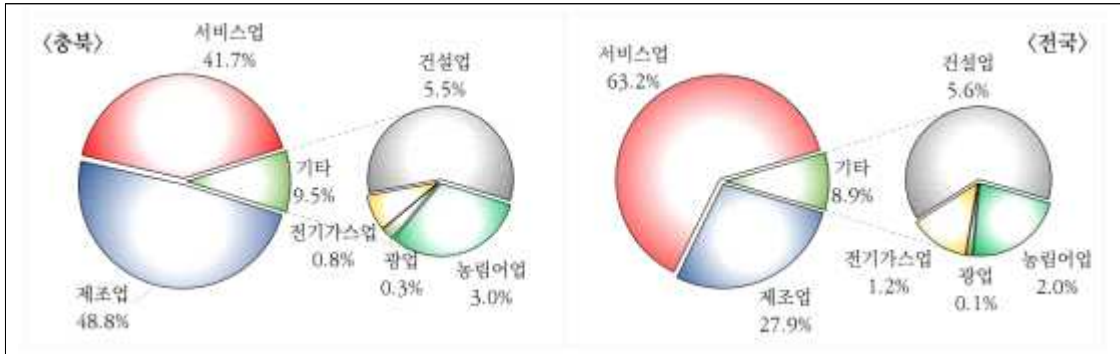
- 충북의 1인당 GRDP나 1인당 지역총소득은 전국대비 비교적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1인당 민간소비는 전국 최하위 수준임
- 근로시간은 전국 3위인 반면 근로자 임금은 전국 11위로 노동생산성 저조이거나 노동에 대한 대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근로자의 유효수요 부족 초래
- 취약한 소비여력, 전국 15위 : 2022년 기준 충북의 가구당 순자산은 2억 9,186만 원으로 전국(4억 5,602만 원)의 64.0%에 불과하며, 이는 전국 15위 수준에 해당
- 가구자산 3억5,099만 원(전국14위)-가구부채 5,913만 원(전국 5위)=소비여력
- 높은 역외유출 심각, 전국 3위 : 충북의 지역외순수취분원소득은 -12.9조 원으로 충남, 전남에 이어 전국 3위 수준이며 제조업 비중이 40%를 넘어선 2010년 이후 역외유출이 급격히 증가함



<그림6> 전국 17개 시도별 역외유출 및 충북 제조업 비중(2021년)

자료: 충청북도(2023). 충북경제 GRDP 100조원 시대 도약 전략수립: 충북경제진단.

- 역외유출은 주로 **직주 불일치**(충북 외 지역에 거주하는 통근노동자), **본사의 부재** 등에 의해 발생하는데, **제조업 비중이 40%를 상회**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특히 심화로 대외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반응



<그림7> 전국 및 충북 산업구조 비교(2021년)

자료: 충청북도(2023). 충북경제 GRDP 100조원 시대 도약 전략수립: 충북경제진단.

- 소득의 역외유출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 모색 필요
- Soft Power 시대에 **생활밀착형 서비스업 활력 제고**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창출 확대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필요

2. 투자유치 : 공약 60조 원 목표 중 2년 만에 50조 1000억 원 (83.5%) 달성

출처: 뉴시스 2024.06.11. 충북도, 투자유치 목표 100조로 상향

1) 전체 투자유치 금액 중 BBC(Battery, Bio, Chip) 분야에 40조 3000억 원의 투자가 집중(80.6%)

- SK하이닉스가 AI용 반도체 HBM 수요 급증에 따름
- 경제적 파급효과: 생산 61조 3000억 원, 부가가치 25조 원, 취업 39만 5000명 등 유발효과 발생(충북연구원 6월 10일 분석)

2) 타 시도 대비 투자유치 실적은 압도적 1위(충북 50조 1000억 원) 차지

- 경기 50조 원, 세종 1조 9000억 원, 충남 19조 원, 강원 1조 원, 부산 8조 원, 울산 20조 7000억 원, 경북 11조 7000억 원, 경남 15조 1000억 원, 전북 11조 7000억 원으로 집계

3) 산업별 투자유치 현황

- 반도체(ICT·융합) : SK하이닉스가 AI용 반도체 HBM 수요 급증에 따라 33개 기업으로부터 투자금액 28조 7939억 원 유치
- 이차전지(태양광·신에너지) : LG엔솔, 현대모비스 등 31개 9조 3572억 원
- 이오 : 셀트리온제약, 휴온스, 일양약품 등 24개 업체 2조 1836억 원
- 바이오·유기농·농식품/신교통·항공/화장품·뷰티/기타 753개 업체로부터 8조 1224억 원 유치

4) 따라서, 지난 6월 11일 투자유치 목표 60조에서 '100조 상향' 발표

- 다만, 대기업 및 제조업 중심의 투자 편중을 다변화시키는 전략 모색 필요

3. 충북 특구 및 특화단지 선정

출처 : 충청도정소식(<http://news.chungbuk.go.kr>)

1) K-바이오 스퀘어 조성(23.06.01)

- 범위 : 오송역 남측 3국가생명과학단지
- 투자 : 오송 K-바이오스퀘어는 총 사업비 2조 4천억 원 규모
- 1단계 조성사업(2025~2029년)에서는 5천억 원 규모를 투입, K-바이오 스퀘어의 전반적 기반을 조성하고, 2~3단계 조성사업(2030~2037)에서는 1조 9천억 원의 규모를 투입
- 목표 : 난치·불치병 치료이며, 수단은 인공지능(AI)을 활용
- 산·학·연·병 집중을 통한 한국형 쉐달스퀘어로 대한민국 첨단바이오 기술 주권을 선도하고 초격차 기술 확보 등 오송을 글로벌 바이오 R&D의 중심 클러스터로 조성
- AI를 이용한 희귀병 치료 연구와 국내외 석학이 모인 캠퍼스 조성은 물론 1천병상 이상을 갖춘 연구병원 설립, 최신 신약 물질 개발에 희귀병 치료까지가 오송 K-바이오스퀘어 청사진
- KAIST(한국과학기술원)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 : 토지를 무상 제공하여 KAIST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메디컬 교육과정 운영, 난치병 치료 연구, 벤처기업 설립 등 계획
- 연구중심병원 : 우리나라 빅5 병원을 포함해서 세계적인 대학에서 온 우수한 인재를 끌어들이는 게 목표
- AI 영재고 : KAIST 한국과학영재학교 오송캠퍼스 형태로 충북단지 내 조성할 계획으로 2026년까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학습연구동과 기숙사동을 건립하고,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정원 학년당 50명(총 150명) 예정
- 첨단 바이오기술 연구개발(R&D) 및 연구 장비·시설 구축, 창업 및 벤처기업 전주기 지원·육성 등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첨단 바이오산업 역량을 집적 및 육성
- 2040년까지 첨단 바이오기업 200여 개 유치, 일자리 2만 개 창출, 테카콘 기업 5개 육성 등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을 목표

2) 바이오의약품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23.10.05)

- 범위 : 청주 오송읍 일원 3개 산업단지에 R&D 등
- 투자 : 연구개발, 기반구축 등 4년간 1조 6212억 원 투자
- 기대효과 : 경제 파급효과는 2027년까지 1만 4400명 고용 창출과 10조 9700억 원 생산액 증대 등
- 특화품목: 충전용기, 정제용필터, 유전자전달체 등 6개 품목
- 청주 오송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6대 보건의료 국책기관과 바이오벤처 등 260여 개 기업이 밀집돼 있어서 단기간 내 성과 창출이 용이
- 오송생명과학단지는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및 소부장 실증단지, 오송바이오산업단지는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제조산업단지로, 오송화장품산업단지는 융합바이오 소재 제조단지로 조성될 예정
- 오송생명과학단지 483만 3000㎡, 오송바이오산업단지 28만 3000㎡, 오송화장품산업단지 79만 6000㎡ 등 총 3개 단지 591만 2000㎡
- 바이오의약품 소부장은 중간재라 일반인이 중요성을 모르지만 완제품 시장의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중요한 역할을 해 게임체인저(국면 전환 요소)로 불림
- 그러나 현재 국내 바이오의약품 소부장은 90% 이상을 해외에 의존한다. 미국과 독일 등의 글로벌 5대 기업이 세계시장의 75%를 점유해 국산화 시급.
- 충북도는 이미 셀트리온제약, 유한양행 등 23개사와 1조 3490억 원 상당의 바이오 소부장 특화단지 투자협약을 체결한 상태

3) 전국 최초의 오송‘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 특구 확정(24.04.30)

- 범위 : 오송 등 청주시 일원 941km² 규모
- 기간 : 내년부터 2028년까지 4년
- 투자 : 특구에 모두 500억 원 이상을 투입
- 글로벌 혁신 특구 : 국내 최초로 신기술에 대한 실증을 원칙으로, 명시되지 않은 규제를 전면적으로 풀고 실증과 인증, 허가, 보험 등에 글로벌 기준이 적용되는 완결형 혁신 클러스터
- 줄기세포 등 각종 면역 세포를 활용한 치료제를 개발하거나 시술하는 첨단재생바이오 기업들을 집중 육성할 계획
- 해외 원정 치료를 국내 치료로 대체해 희귀, 난치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국내 품목 허가가 어려운 의약품은 일본 바이오 클러스터인 쇼난 아이파크와 연계하는 방식 등으로 해외 진출도 지원

4.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출처 : 충청북도(2023.06).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비전 및 추진전략 : 3대 분야 전략사업 및 권역별 중점사업 추진현황.

1)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개념

- 개념 : 충주호·대청호 등 757개의 호수(저수지)와 백두대간의 가치를 창조적 혁신을 통해 극대화하여 충북을 재발견하고, 충북도의 정체성, 브랜드를 바로 세우는 「더 살기 좋은 충북」 프로젝트
- 지향점 : 창조적 혁신을 통해 충북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충북 대전환 프로젝트를 하는 한편 주민체감형 정주여건 개선사업도 추진한다”고 김 지사는 밝혔다.
- 업범위 (협의) : 수(水)자원, 산림자원, 폐자원의 가치 재발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선도 사업
- 업범위 (광의) : 창조적 혁신을 토대로 담대한 구상과 과감한 실행력 그리고 따스한 도정이 결합된 「더 살기 좋은 충북」 프로젝트로 도정 쏠분야에 걸쳐 추진되는 민선 8기 핵심 전략사업

2) 비전 및 목표

- 비전 : 중부내륙시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中心 충북
- 목표 : 164만 도민 모두가 공감하는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실현
- 추진 사업 : 3대 분야별 전략사업 + 3대 권역별 중점사업
- 규모 : (15개 26,349.6억 원) + (333개 68,517.9억 원) = 348개 94,867.5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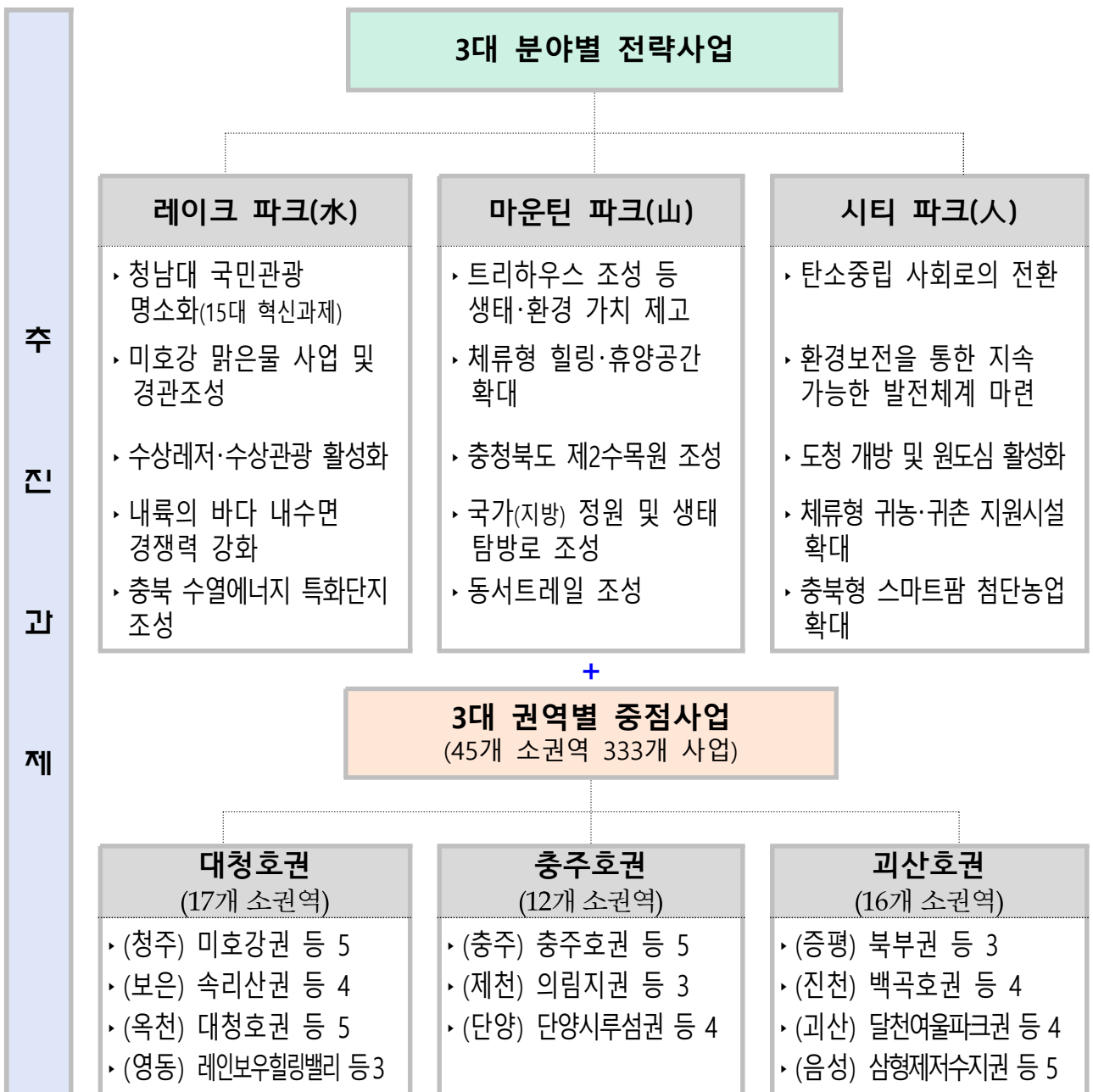
3) 분야 및 권역

- 3대 분야 : 레이크 파크(水), 마운틴 파크(山), 시티 파크(人)
- 3대 권역 : 대청호권, 충주호권, 괴산호권 (45개 소권역 333개 사업)

4) 전략사업 및 추진구조

비전	증부내륙시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中心 충북
목표	164만 도민 모두가 공감하는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실현

3대 분야별 전략사업 + 3대 권역별 중점사업
 (15개 26,349.6억 원) + (333개 68,517.9억 원) = 348개 94,867.5억 원



5. 도지사 공약 20대 경제 분야 추진상황

- 모든 경제분야 공약의 2023년도 말 기준 추진상황은 정상추진으로 공표됨

1) 경제를 풍요롭게

-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복원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소외와 단절 없는 안전하고 두터운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 글로벌 혁신메카를 조성하여 융복합형 창조적 성장엔진을 만들겠습니다.

경제를 풍요롭게	추진상황	비고
1. 충북창업펀드 1,000억 원 조성	정상추진	
2. 소상공인지원센터 확대 운영	..	
3. 대기업 중심 첨단 우수 기업 60조 투자 유치	..	
4. 중소중견기업 5,000개 수출 전략화 육성	..	
5. 중소기업 ESG경영 대응 지원 강화	..	
6. 청소년 창업공간 제공 및 복합문화센터 설치	..	
7. 청년 소상공인 창업 후 첫 부가가치세 지원	..	
8. 충북일자리지원센터 기능 강화	..	
9. 중대재해로부터 안전한 일터 조성 지원사업	..	
10.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참여기회 확대	..	
11. 산업단지 중소기업 출퇴근 지원	..	
12. 청년 취업역량강화 교육	..	
13. 청년 잡(JOB) 앱으로 상시 취업고용 현황 실시간 제공	..	
14. 선순환형 여성특화 취창업 생태계 조성	..	
15. 방사광가속기 적기 구축 및 최첨단 연구인프라 조성	..	
16. AI, 이차전지, 수소경제 생태계 등 신산업 육성	..	
17. K-코스메틱 클러스터 핵심지원시설 구축	..	
18. 시스템반도체 첨단 후공정 기술지원 인프라 구축	..	
19. 오송 원헬스 융복합센터 건립	..	
20. 미래차 핵심지원시설 구축	..	

출처 : 충북도청 홈페이지, 도지사공약/공약추진상황

<https://www.chungbuk.go.kr/governor/contents.do?key=4419>

2) 충북형 일자리 사업 : 도시근로자, 도시농부 등 단기 근로사업 효과

- 충북지역 5월 고용률 역대최대 72.8% (동양일보, 24.06.16)
-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5월 고용동향에서 충북의 15세 이상 고용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6%p 증가한 72.8%로 집계되어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9

년 6월 이후 최고 수치

-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에는 제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으며 전국 평균(63.5%)과 비교하면 9.3%p 상회
- 지난 5월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는 50만 1천 명으로 2.9%(1만 5천 명) 감소했으나 임시근로자는 15만 2천 명으로 21.6%(2만 7천 명)이 증가(성과&과제)
- 충북의 고용률 상승은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유입을 유도하는 단시간 근로사업인 충북형 도시근로자·도시농부 사업 등에 의한 임시근로자 수 증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 충북형 도시근로자·도시농부 사업은 유희인력을 하루 4시간씩 제조 분야 중소기업이나 농가에 연결해 주는 일자리 정책으로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도시근로자 사업에 2만 6천702명, 도시농부 사업에는 5만 1천173명이 참여
- 도는 유연한 근로시간 수요에 대응한 단시간 근로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는 한편 노인·여성·청년 등 계층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확대할 계획

6. 충북 경제부문 향후 추진 과제

자료: 설영훈(2023). 충북의 민간소비 진단, 충북연구원, 충북포커스 제216호.
충청북도(2023). 충북경제 GRDP 100조 원 시대 도약 전략 수립: 충북경제진단.
뉴시스 2024.06.11. 충북도, 투자유치 목표 100조로 상향.

1) 투자 및 산업구조의 다변화

- 방향성 : 대기업·제조업 중심 충북 경제구조를 스타트업(벤처)·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
- 기존 대기업 중심의 투자유치에서 벗어나 첨단산업·신산업 분야의 스타트업·벤처 등 R&D 중심기업 유치 확대
- 기존 첨단산업분야 투자유치는 AI 핵심 HBM 등 차세대 반도체,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2차 전지, 합성 생물학, 첨단재생의료 등 첨단바이오는 지속 확대
- 방사광 가속기가 완공 이후 미래 신산업 분야 투자 유치에 집중 : 반도체·디스플레이·IT, 에너지·이차전지, 의료·바이오(암 치료제 및 신약 개발), 철강금속·조선, 화학, 자동차·타이어, 기타 산업 (화장품, 섬유, 건설, 농식품, 임업 등) 등의 신산업 분야
-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신산업 분야 개척을 통해 양자산업, 인공지능, 수소 등 신에너지 유치
- 제조업 중심인 충북의 경제구조를 바꾸기 위해 서비스산업 유치로 역외유출 완화 노력하고 교육(AI영재고, 국제학교), 의료(의대정원확대, K-바이오스퀘어), 콘텐츠(영상, 웹툰, 게임), 서비스산업(대형유통·관광)을 유치에 주력
- 투자유치와 관련해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운용, 국가 산단

(노송·충주) 조기 착공 등

- 부족한 지역 일자리는 AI(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1차 산업 강화??

2) 교통망 확충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 청주·진천·음성 편중 완화하고 그간 소외된 지역 투자로 균형발전 노력
- **도로** :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 준공, 영동~진천고속도로(2031년까지 70km), 오창~영동 민자 고속도로(보은·옥천·영동·괴산 친환경 신산업벨트), 서울~세종 고속도로(오송지선), 중부고속도로 6차선 확장, 제천~삼척 고속도로 추진
- **철도** : 충청권 광역철도(청주공항~신탄진 노선 건의), 중부내륙철도(충주~문경), 중부내륙선 접근성 향상을 위해 청주공항~보은~김천 철도와 함께 중부내륙선 음성 감곡~혁신도시 지선 사업, 천안~청주공항, 동탄~청주공항, 청주공항~김천(미싱링크 연결),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충남 서산~경북 울진, 청주 오창역 신설 안), 중부내륙선 복선화, 오송 연결선 등을 건의 등 추진
- **항공** : 청주공항의 공항 관련 인프라는 이미 가용한도를 초과로 인해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 시급, 청주국제공항은 당초 연간 441만 명의 최대인원을 예상하여 설계되었는데, 한국공항공사는 이용객을 2024년 476만 명, 2025년 526만 명으로 전망(충북일보, 2024.06.04.)

3) 과제

- 현재까지의 양적 성과는 민선 7기 도정의 성과와 혼재되어 있는 만큼 **민선 8기 후반기 도정 성과가 더욱 중요함**
- **투자유치의 양적 부분**은 여전히 SK하이닉스와 LG에너지솔루션, 셀트리온 제약 등 대기업 및 제조업의 투자유치에 지속적 노력하되
- **미래 신산업 투자 유치 및 중소벤처 및 서비스산업 육성** 등 산업구조 다변화 및 질적 성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행, 재정적 지원 등으로 과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
- **교통물류 분야**에 있어서 육로 교통수단을 통한 성장건인은 근본적 한계가 있으므로,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하늘 길 확장을 통해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 도모 필요
- 부족한 지역 일자리는 AI(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1차 산업 강화 및 단기 근로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의료, 문화, 게임, 먹거리, 관광, MICE, 숙박, 물류유통 등 다양한 **서비스산업에 지원 확대를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 가능**
-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서비스산업 활성화의 한 축으로 두고 장기적인 비전으로서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전략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을 단계적으로 개발 및 추진 필요

충북도정 2년의 성과와 과제- 의료 및 보건 관련

김헌식 (충북대 의대 교수)

1. 보건의료 관련 공약 정리 ('복지를 든든하게')

공약 명		사업비	기간	추진
72. 독거노인 취약계층 안전확인 체계 확대	계속	144.4억 원	22~26	이행
73. 시로봇 돌봄 관리 서비스 확대	계속	24억 원	23~26	정상 추진
74. 의료비후불제 도입	신규	300억 원	23~계 속	정상 추진
75. 충북 권역재활병원 지정·운영	신규	200억 원	24~25	정상 추진
76. 공공의료 취약지역 응급 지원 확대	신규	56억 원	23~26	이행
77.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설립 추진	신규	4,080억 원	24~29	정상 추진
78.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신규	70억 원	22~26	정상 추진
79. 공공의료 재정지원사업 확대	계속	494억 원	22~26	이행
80. 지역인재활용 및 의료기반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신규	비예산		정상 추진

2. 공약별 평가 및 제언

(1) 의료비후불제 도입

1) 개요 및 실적

- 개 요 : 65세 이상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 대상 질환 : 14개 수술 및 시술
- 의료기관 : 233개소(종합병원급 13, 병원급 14, 치과 병·의원 206)
- 지원방식 : 3년 무이자 분할상환(1인당 50만원 ~ 300만원)
- 지원 실적 : 24년 1월, 수혜자 500명 돌파

2) 평가 및 제언

- 전국적으로 충북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출범 2년 만에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참여 의료기관이 늘어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앞으로 대상 질환과 수혜자 확대를 위해서는 기금 확충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기업들의 사회적 ESG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모금할 필요가 있음.
-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단지 의료비용만 지원하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다른 형태의 건강생활 실천을 할 경우에 지원액이나 상환 조건 등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 등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예를 들어, 수혜자가 운동을 열심히 하여 고혈압이나 당뇨 체중관리가 된다면 상환액 감면이나 면제 또는 상환 조건 우대 등)...

(2) 충북 권역재활병원 지정.운영

1) 개요 및 실적

- 개요 :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중 공모 선정.
- 주요 기능 : 재활치료(후유질환 치료/장애기능유지 치료), 돌봄 등 지역연계 사업
- 실적 : 주민공청회(23년 12월) / 타당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24년 1월)

2) 평가 및 제언

- 새 의료기관의 설립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며 재활의료 전문 의료인의 부족으로 필요한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재활의료만을 전문으로 하는 독립병원의 효율성에 대한 비판과 의문이 제기됨. 기존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재활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권역재활병원 설립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는 주장을 경청할 필요 있음.
- 재활의료의 장애인 특화 분야는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등 공공 의료기관에서 전담하게 하고, 민간 부문의 타 질환에 관한 재활서비스 공급은 충북대병원의 거점병원과 지역사회 연계사업에서 집중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즉, 현재 복지부에서는 책임의료기관에 일정 비용 지원하면서 연계협력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어 이 영역에 재활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3)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설립 추진

1) 개요 및 실적

- 위치 : 충주바이오헬스 산단 내(대소원면 완오리 일원, 49,355㎡)
- 기간 : 2024. ~ 2029.
- 총사업비 : 4,080억 원(국비 1,020, 충북대병원 3,060)
- 사업내용 :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건립 지원(500병상)
- 향후계획 : 26년 착공, 29년 12월 개원

2) 평가 및 제언

- 문제점 : 충북대병원 자부담(75%) 재원 마련 지난 (교육부 지원 50%로 상향 건의)
- 우려사항 : 충주의료원 병상확보 및 경영악화 악영향 / 인력확보(의대정원 확대로 해결?)
- 충주의료원 활성화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충북대병원 분원은 적자가 확실 시되니 중지를 검토해야 함.
- 충주의료원의 시설과 장비를 충북대병원 수준으로 지원하고 충북대병원의 중환자실 모니터링을 원격으로 할 수 있게 하여 충주의료원의 중증 환자 관리역량을 대학병원 수준으로 사이버연계(스마트병원 사례: 서울분당병원과 이천의료원의 중환자 모니터링 협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음.
- 충주의료원과 충북대병원의 진료환경을 Digital connected hospital 개념과 방식으로 연계 강화해야 함. 신설 건립예산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의료원 현대화를 이룰 수 있고 의료원 의료진의 자긍심 제고와 우수 인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임.

(4) 지역인재활용 및 의료기반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1) 개요 및 실적

- 사업위치 : 충북대학교, 건국대 글로벌캠퍼스
- 증원목표 : 95명*, 증원 후 184명(충북대 111, 건대 충주 73)
- 사업내용 : 현재 정원 89명 → 증원목표 184명
- 실적(?) : 충북지역 의대정원 확대 : '24. 3. 20.
 - 총 300명(211명↑) : 충북대 200명(151명↑), 건국대 글로벌캠 100명(6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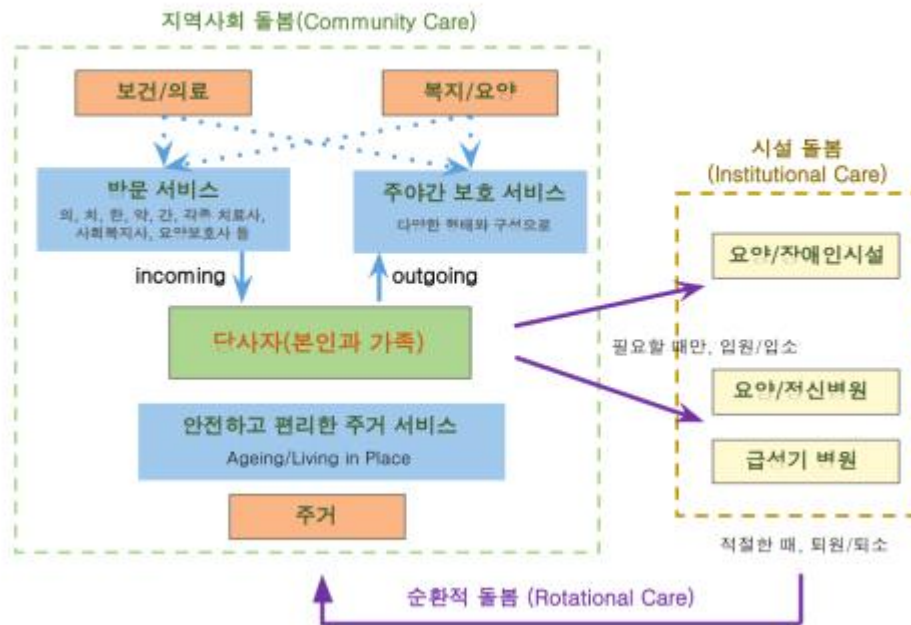
2) 평가 및 제언

- 충북의대의 경우 수년 전부터 50명도 안 되는 입학정원을 최소한 80명, 많게는 100명 정도로 증원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왔음.
- 하지만 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 밀어붙인 의대 입학정원 확대(전국 2,000명 추가, 지방 거점국립대 200명으로 통일)는 의학교육의 총체적 부실화는 물론 자연계 등 타분야 대학입시와 우리나라 이공계 우수인력 확보 등에도 지대한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 분명한 대단히 문제 많은 잘못된 정책임.
- 충북의대는 1987년 설립 이래 우수한 의료진을 다수 배출했지만, 내년부터 당장 200명을 교육시키는 것은 물리적으로나 인력 면에서나 불가능에 가까움.
- 그나마 다행히, 2025년에는 200명이 아닌 125명을 받게 되어 교육 붕괴의 위기는 살짝 피할 수 있게 되었으나 26년부터 200명 입학이 현실화된다면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 우려됨.
- ‘낙수 의사’라는 자조적 표현에 담긴 의료계의 우려와 불만을 충분히 경청하고 올바른 의료정책으로 전환해야만 함.

3. 보건의료 분야 공약 전반에 대한 제언

- ‘건강’은 단지 의료 분야 뿐 아니라 복지와 환경, 건강습관, 의료제도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제대로 달성될 수 있는 중요한 삶의 목표임.
따라서 보건의료 분야는 관련된 타부서의 사업과 통합되어 조정되고 연계될 때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음.
- 2019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설립된 중앙과 각 지방의 사회서비스원은 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건의료가 함께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기관으로 설립했는데, 신규 사업발굴에서 과연 보건의료 분야와의 충분한 연계를 기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아쉬운 점이 많음.
- 복지 분야의 다른 공약이나 서비스들 중에는 보건의료 분야와 연계하면 더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는 것들이 많이 있음.(예를 들어 온종일돌봄확대, 충북형돌봄주택공급, 초고령사회파크골프장등의 체육시설확충, 독거노인취약계층안전확인 등)
- 충북도에도 이미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이 보건의료와 복지를 제대로 연계하여 도민들의 건강을 더욱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에 대한 조정 권한과 기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02 지역사회돌봄 체계의 구성



민선8기 충북도정 2년, 성과와 과제 토론문

박종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말로는 ‘환경특별도’, 실상은 ‘개발특별도’

김영환 지사 취임 이후 “차 없는 충북도청”을 발표했을 때 충북도가 조금 달라지려나 하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그 꿈은 얼마 지나지 않아 허상이 되었다. 민선 8기 전에 비해 눈에 띄게 환경과 관련된 공약이 많다. 차 없는 충청북도를 시작으로 민선 8기 주력 사업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미호강 프로젝트, 청남대 개발과 대청호 규제 완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올해는 ‘환경특별도 충북’ 선언까지 연이어 환경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충북도가 발표한 환경정책들이 환경을 지키고 보존하는 정책이 전혀 아님이 문제다. 충북도가 발표한 모든 환경과 관련된 공약, 정책들은 오히려 반환경적이다. 개발정책을 환경정책으로 보기 좋고 듣기 좋게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

- 차 없는 도청 추진한다더니, 주차 공간 늘리려고 수십 년 된 나무들 가차 없이 훼손

김영환지사 취임 이후 도청의 오래된 향나무 가지치기를 시작으로, 도청 잔디광장을 조성하겠다고 작은 연못을 메우고 일부 나무를 베더니 주차공간을 늘렸다. 이어 울타리 향나무를 제거하고 잔디를 심었다. 급기야 얼마 전에는 의회동과 본관동 사이의 수십 년 된 나무들을 훼손하고 작은 관목들은 뽑아버렸다. 서문옆 향나무 울타리도 제거했다.

이유는 현재 3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충북도청의 주차공간을 두 배로 늘리기 위해 의회동 뒤편에 주차타워 건설을 위한 정화조 이전 공사를 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기후위기로 인한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가 시급한 지금, 옥상정원 조성을 위해 동관동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철거한 것이다. 차 없는 도청 추진은 역시나 말뿐이었으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도심 녹지축을 확대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해서 도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장려해도 모자란 판에 시대정신을 역행하는 도정운영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 불법투성이 청남대 개발, 주민불편은 외면한 대청호 규제완화

수십 년간 수많은 규제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 대청호 규제와 청남대 개발을 촉구했지만, 실상은 주민들의 지원이나 편의가 아니라 오롯이 청남대 개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주민들은 여전히 이 요구에서 소외되어 있다. 작년 초 현행법에서 허용할 수 없는 청남대 개발 공약을 발표하면서 논란을 사더니 급기야 행정에서 불법을 자행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이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감사원에 충청북도가 청남대에서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공익감사청구”까지 진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제기한 감사청구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농약 살포 및 불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수도법 위반),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주차장 조성 및 운영(개발행위 허가목적 외 사용), 예산 목적 외 사용 및 의회 승인 없이 예산 불법전용(벙커 피깅러리 등), 상수원보호구역 내 푸드 트럭 야외취사행위 허용(수도법위반) 및 기부행위 강요에 의한 직권남용,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락행위 및 행락시설 설치(수도법 위반), 청남대관리사무소 민간위탁 매점 불법행위 방조 및 관리소홀, 권한 외 행사 등(충북도 식의약안전과) 7가지나 된다. 시민들의 불법을 감시하고 계도하고 본보기를 보여야 할 행정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모습을 도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의문이다.

- 미호강 프로젝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역시나 개발

충북도가 발표한 미호강 프로젝트는 수질개선을 포함하고 있지만 미호강을 친수여가 공간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주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미호강 상류에서부터 무심천과 만나는 합수점까지 구간의 대규모 하천 준설 계획은 역시나 하천 생태계를 파괴하는 전형적인 개발 정책이다.

작년 오송지하차도 참사 이후 진행된 청주시의회 ‘기후위기 시대 미호강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와 충청북도가 주최한 ‘미호강 치수대책 자문회의’에서도 하천 준설보다 보를 해체하고 유역 전체를 아우르는 중장기적인 하천 계획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또 미호강 유역은 하상 경사가 낮고 유속이 느려 흙이나 모래가 잘 쌓이기 때문에 준설을 해도 1~2년 후에 다시 준설해야 해서 준설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충북도는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무시하고 미호강 준설을 강행해 혈세를 낭비하고 미호강에 서식하는 수많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

- 무소불위의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추진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 간신히 통과는 되었지만, 이 법에서 요구하는 핵심사항들을 모두 빠지고 이름만 제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김영환 지사는 이 법을 개정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 이 법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정부 부처에서 조차 과도한 법률 조항이라고 판단했을 정도로 난개발을 부추기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호수진흥지구 지정/특례’, ‘하천법에 관한 특례’, ‘한강/금강 수계법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및 산림보호법에 관한 특례’, ‘자연공원법에 관한 특례’, ‘자연환경보전법에 관한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등에 더해 이번에는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농업 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조항까지 추가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 내용을 포함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된다면 말 그대로 이 법은 무소불위의 환경파괴특별법이 될 것이다.

김영환 지사가 이 법에 이토록 목메는 이유는 민선 8기 핵심공약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 때문일 것이다. 강과 호수를 중심으로 산을 연계해 충북지역을 개발하겠다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현행법으로 정한 강, 호수, 산의 수많은 행위제한 때문에 김영환 지사 맘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그래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그러면서 환경특별도를 선언하고 마치 자신이 환경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위선이다.

즉흥적이고 말만 앞서는 이벤트성 충북도정 운영

- 충북도 대표 브랜드 못난이 김치, 알고 보니 타 지역배추로 만든 김치

수확을 포기한 배추를 수확해, 못난이 김치를 만들어 지역의 농가를 살리고 싼값에 국산 김치를 공급하고 충북의 대표 브랜드로 만들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런데 실상은 충북에서 배추가 생산되지 않는 봄, 가을에는 해남과 강원도에서 배추를 공급받아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충북의 대표적인 농산물인 양 유통비용까지 지원하면서 홍보하고 있는 것은 충북도민뿐만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고 충북도정을 운영하는 자치단체장의 처신이라고 볼 수 없다.

- 중장기적인 충북도의 비전은 없고 보여주기 식의 선 발표 후처리 공약 난발

매번 반복되는 이벤트성 공약, 그리고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식의 대응은 항상 김영환 지사를 궁지로 몰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성이나 정책 변경은 없고, 일관되게 자신의 고집대로 도정을 운영하는 것은 큰 문제이다. 충청북도의 최고 책임자라면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예산은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발표하고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언제나 즉흥적이고 뜬금없이 발표되는 정책에 시민들은 항상 혼란스럽고 불안하다.

민선 8기 충북도정 2년, 성과는 없고 과제만 남아

지난 2년을 돌아보며 아무리 긍정적으로 평가해도 성과는 없다. 취임 초기 김영환 지사는 연일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충북도민의 자랑은커녕 수치였다. 생각 없는 말부터 앞세우며 발생하는 잦은 말실수,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행동, 충북도민의 정서에 반하는 언행. 가장 중요한 것은 30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지하차도 참사의 책임을 회피하고 사과조차 하지 않은 무책임한 모습은 충청북도의 최고 책임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 바라건대 이제부터라도 충청북도 도민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환경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고 싶은지 물어보고 이를 위한 정책을 만들기 바란다.

오송참사를 통해 본 김영환 도지사 민선 8기 2년의 평가와 과제

박진희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의원)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2023년 7월 12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8기 김영환 도지사 1년의 난맥상과 그 해법을 대국의 기술에서 찾아보고자 했다. <‘부득탐승’의 김영환 도지사 1년, 지금은 ‘복기’의 타이밍>. 그날 5분 자유발언의 제목이다. ‘부득탐승’과 ‘복기’는 모두 바둑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바둑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아마 제목만으로도 5분 발언의 내용과 흐름이 짐작 가능할 것이다.

‘부득탐승(不得貪勝)’은 승리에 집착하면 오히려 일을 그르치기 쉽다는 의미로 바둑을 둘 때 명심해야 할 십계명인 ‘위기십결’ 중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다. ‘복기(復基)’는 한 번 두고 난 바둑의 판국을 비평하기 위하여 두었던 대로 다시 처음부터 놓아 보는 일을 말한다. 복기는 바둑의 십계명인 ‘위기십결’에는 없지만, 바둑의 가장 신묘한 기술로 대국의 전체를 되돌아보는 반성의 시간이며 유일하게 패자가 승자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는 시간이다.

1년 전, 민선 8기 김영환 도지사의 도정 1년에 대해서 ‘기꺼이 친일파 발언, 제천 산불 당시 술판과 거짓말 논란, 지연과 학연, 인연에 기반을 둔 측근 기용 문제, 시대착오적인 대통령 부부 사진전 해프닝, 직무수행평가 연속 하위권 기록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낙제점을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도정으로 평가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복기’라는 과정을 통해 도정 1년을 되돌아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반성해 바른 방향으로 전향한다면 분명 충북도정의 나머지 3년은 지난 1년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희망을 품었다.

이 5분 자유발언 이후, 국민의힘 충북도당에서는 곧바로 비판성명이 발표됐다. 도당에서 상대당 도의원 한 사람에게 대한 비판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지역정가에서는 이례적인 일이다. 성명에서는 본 의원이 김영환 지사 헐뜯기와 흠집 내기, 망신주기에만 몰두해 도민의 자존심을 훼손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그리고 김영환 도지사의 의사가 적극 반영됐다는 이 성명이 발표되고 이틀 후 7월 15일, ‘오송 참사’가 발생했다.

자신의 책무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도지사, 반성하지 않는 도지사, 안정적인 정책 추진보다 보여주기식 치적 쌓기에만 몰두하는 도지사, 설익은 아이디어로 시행착오를 일삼는 도지사, 진실된 해명 대신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도지사 취임 1년 만에 충북도는 사상 초유의 너무도 비극적 참사를 맞게 되었다.

참사 전날, 백 년 만의 폭우라는 큰비 속에서, 그리고 재난 최고 단계인 비상 3단계가 발령된 상황 속에서 김영환 도지사가 향한 곳은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아닌 서울이었다.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최고책임자라는 자신의 책무를 망각하고 관할구역인 충북을 벗어나 서울만찬에 참여해 개발업자들을 만난 것이다. 재해재난을 막기 위해 촌각을 다투 일해도 모자랄 시간에 전혀 급할 것 없는 서울만찬을 즐긴 결과가 바로 '오송참사'가 아니었을 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최고책임자가 책무를 망각하고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를 비우는데 그 어떤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고 그 어떤 공무원이 제 역할을 다 하겠는가? 홍수 경보가 발령되어도, 제방이 무너져 미호강이 범람을 하여도, 그렇게 넘친 물이 공평2지하차도를 집어삼키는데도, 우리 충북도는 그 시간 그 사실조차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참사 이후에도 누구 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다. 존재하지도 않았던 도지사 주재 긴급점검회의록이 거짓으로 꾸며지고 이것이 발각되자 직원의 단순 실수로 떠넘긴다. 참사 발생 4시간 이상 지난 후에 현장에 도착한 도지사는 자신이 빨리 갔어도 달라질 게 없었다는 희대의 망언을 하는가 하면 시민분향소를 유가족도 모르게 도둑철거 한다. 유가족과 협의 없이 1주기 추모행사와 추모비, 백서 제작을 추진하다 도의회에서 결국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기도 하였다. 내년 상반기 준공인 미호강 제방을 도지사는 6월 조기 준공이라고 허위 발표하더니 논란이 일자 용어 착오로 인한 단순 실수라 얼버무린다. 도무지 충북도의 행정과 정책 추진, 도지사의 발언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재개통하겠다는 공평2지하차도는 공사 기간이 계획보다 한 달 이상 빨라지면서 과연 안전할 것인가 시민들은 걱정이 앞선다. 그런데 도지사와 측근들은 그들의 안위만 걱정하는 것 같다. 최측근이 '도지사 불기소 탄원서'를 돌리는 것이 밝혀져 셀프 구명 의혹까지 일고 있다.

지난 1년 김영환 도지사가 해야 했던 일은 오송참사에서 교훈을 찾는 일이었다. 또 자신이 충북도정의 최고 책임자라는 것을 자각하고 오송참사의 교훈을 통해 충북도정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야 했다. 그러나 김영환 도지사는 도피를 선택했고 오송참사에서 벗어나려 할수록 오히려 스스로를 중대재해처벌법의 피의자 신분에게 가두고 말았다.

책임지지 않은 최고책임자를 신뢰하는 도민은 없다. 매달 실시하는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김영환 지사가 지난해 5월 이후 12개월 연속 10위 안에 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도민의 생활만족도 역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민선 8기 2년 차를 오송참사로 시작해 광역자치단체장 최초로 주민소환의 대상자가 되었던 김영환 도지사. 그를 둘러싼 논란과 의혹은 날이 갈수록 커져 간다. 66억 4,575만 원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중 재산 신고 1위라더니 1년 사이 67억 원 이상이 감소해 올해는 -8,061만 원으로 광역자치단체장 중 꼴찌가 되는 석연치 않은 기록을 세웠다. 서울 북촌 한옥의 매매 과정에서 뇌물수수 의혹이 일자 끝내 계약을 파기해 의혹을 가중시키기도 했다. 또 지역의 폐기물관리업체에서 30억 원의 돈을 빌려 이해충돌 등의 이유로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도민이 요구하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청렴도의 기준은 매우 높아졌는데 김영환 도지사의 청렴도 추락의 끝은 알 길이 없다.

차 없는 청사를 만들겠다더니 하루가 멀다 하게 청사 안 나무를 베어내고 뽑아내어 그 자리에 주차장을 만든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공약은 개발 사업이 아니라더니 상수원보호구역인 대청호 인근과 청남대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의 언행불일치는 이제 새삼스럽지도 않다.

농민과 소비자의 상생을 꾀하겠다고 출발한 못난이 김치 사업은 애초 취지와 달리 특정업체 지원과 명품 농산물 브랜드 홀대 논란 등으로 이제는 존폐를 논해야 할 단계이고, 끊임없이 쏟아내는 지사의 설익은 아이디어와 그로 인한 행정혼란, 게다가 괴산 출신, 청주고와 연세대, 수 십년지기와 선거캠프 출신으로 요약되는 불공정 인사까지. 김영환 도지사 취임 초기에 떠돌던 일명 '간신 5적', '간신 7적'의 명단이 지금은 얼마나 더 늘어났는지도 오리무중이다.

김영환 도지사 민선 8기 도정 2년은 실패이다. 하지만 나머지 2년은 성공해야 한다. 바둑의 십계명인 위기십결 중 여섯 번째로 봉위수기(逢危須棄)가 있다. 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버리라는 것입니다. 곤마(바둑에서 살아나기 어려운 말)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최상책이지만 살릴 가망이 없다는 판단이 서면 버리는 게 상책이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정책과 사업, 가까이 지내는 측근 중 요석과 폐석을 구분해야 한다. 자아성찰 또한 엄격해져야 한다. 지나간 시간을 반성해 실패의 원인을 정확히 되짚어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마지막 '복기'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민선8기 충북도정 2년, 성과와 과제

여성·복지 분야 토론문

유영경(청주YWCA 여성·환경위원장)

1. 저 출생·고령화 정책

도민의 직접적인 삶의 질을 담당하는 영역이 여성·복지 분야라고 말할 수 있다. 복지 분야는 정책에 따른 도민들의 체감이 민감하게 작동된다. 대체적으로 복지예산은 충북도 총예산의 36.11%(총 2조 5,742억)라는 매우 큰 예산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하는 많은 부분이 시, 군으로 전달되는 체계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각 지자체가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여러 정책예산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권한이 작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얼마나 밀착된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느냐에 따라 도민의 삶의 질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충북도가 해야 하는 가장 큰 역할은 충북도민 삶의 현재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국가가 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는 부분을 시행하는 것이다.

1) 고령사회

- 충북은 2013년에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함
- 복지 분야 정책 대상은 해당인원의 41.7%인 330,884명(2023.11월말 현재)을 차지함
- 그 가운데 여성노인은 약 56%를 차지, 계속 증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한 여성이 57%를 차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빈곤한 처지에 놓여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저 출생

고령사회는 저 출생과 매우 밀접하다. 저 출생 문제는 충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찌감치 인구 국가비상사태라고 선언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였다. 국가와 지자체는 출생률 증가는 오로지 출산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출산 장려가 출생률 증가 정책이었다. 출산 장려를 위해 시행한 대표적인 사업이 출산수당 지원이었다. 그러나 이미 지속적으로 출생률은 내려가고 있어 정책 효용성이 없다는 결론이다.

- 충북도는 도지사의 대표적 공약사업으로 출생률 제고를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23

년 1월)

- 2023년부터 도내 출생아 1인당 충북형 출산육아수당으로 1,000만원을 지원
- 2023년도 7월에 충북 출생아수 증가율이 전국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충북만 유일하게 증가 출생아수 증가율이 전년도 14위에서 전국1위가 되었다는 홍보를 대단하게 했다.
- 그러나 2024년 출생률 증가는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모든 시도에서 출생률이 감소하였다.
- 저 출생 원인 분석의 부재 : 제도시행 7개월 만에 출생률 증가라는 도정홍보는 저 출생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단기적인 성과 중심의 대책을 간구한 것으로 보인다.
- 처음 출산육아수당은 100만원이었다. 그러나 출산육아수당으로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지원 금액을 올리면 효과가 있을 거라는 전제하에 1000만원을 지급하여 출생률이 올라갔다는 발표는 과도한 도정 홍보라고 볼 수 있다. 1000만원 지원 때문에 출산하려는 여성(가정)은 없을 것이다. 다만 출산한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당사자들의 처지와 욕구에 대한 분석이 부재하다고 볼 수 있다.
- 한국노동연구원의 ‘10년간 무자녀 부부의 특성 변화’보고서(2013년~2023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청년층 기혼 가구 중 무자녀 비중은 27.1%로 2013년 22.2%보다 4.9%포인트 증가했으며, 맞벌이 부부의 무자녀 비중은 약 1.7배 증가한 36.3%로 높아졌다. 반면에 홑벌이 부부의 무자녀 비중은 13.5%로 지난 10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무자녀 부부의 자가 비중은 유자녀 부부보다 17.4%포인트 낮았는데, 주거 불안정성이 무자녀 부부의 출산 저해 요인 중 하나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무자녀 아내의 취업 비중은 유자녀 부부 아내보다 34.4%포인트 높은 71.0%로 직장과 출산·양육 양립의 어려움으로 경제 활동을 포기하는 경우가 유자녀 부부 아내에게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충청(충북, 충남)지역이(수도권 제외) 무자녀 부부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¹⁰⁾
- 사회적으로 저출생 문제에 대한 원인으로 주거 및 고용불안, 높은 사교육비, 실질적인 일·가정양립의 부재라고 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구조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사회·문화·경제 모든 영역에 획기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급하다고 가시적 실적만을 보여주는 행위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우리 충북에서 할 수 있는 도정 전반에 걸쳐 연계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정책수립의 가장 기본인 욕구를 파악하여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젊은이들에게, 당사자들에게 의견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

10) 한국노동연구원, 권익성, [KLI 패널브리프 제29호(2024-02)] 지난 10년간 무자녀부부의 특성 변화 (2020.4.30.)

- 결혼을 통한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형태 이외에도 다양한 가족 형태가 존재한다. 이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정책들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2. 성평등정책

여성 분야로 보면, 민선8기 충북도정은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성정책부서가 명칭은 바뀌었으나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로 존치하였다. 그나마 다행으로 여겨진다. 조직이 있다는 것은 그 분야의 정책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기에 그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된다. 명칭이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로 바뀌었기에 더욱 성평등정책이 도정 전반에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다.

1) 성평등의식·문화

매년 지역 정부에서 지역성평등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역의 성평등 수준을 파악하고,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충북은 2016년 이래 줄곧 중하위권에 머무르다 2018년 중상위권으로 진입, 2020년 하위권으로 하락 이후 2021년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상평등순위에서 지표 관련하여 여성의 대표성이 관리자 비율이 하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성평등의식·문화, 그리고 복지, 보건, 안전의 영역에서 성평등 개선 및 점검이 필요한 지표로 나온 것에 대한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중하위권에서 중상위권으로 다시 진입하길 기대한다.

그리고 <양성평등 기반 구축>을 위한 제2차 충북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4~’28)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적절하게 가동하여 <양성평등 기반 구축>을 해나가길 바란다.

2) 부서의 위상

2024년 기구 조정으로 행정부지사 직속 ‘외국인정책추진단’이 신설되고, 기존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에서 담당하던 “다문화가족업무”가 ‘외국인정책추진단’으로 이관되었기에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의 역할과 기능도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 업무이관으로 부서의 규모가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
- 충북도의 전반적인 성평등정책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 다문화가족사업이 이관되었더라도 관련 가족 등을 담당하여야 한다
: 결혼이민여성과 가족, 아이들에 대한 관계가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 성인지예산과 결산에 대해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에서 중심부서로 정하여, 예산부서와 회계과에서 잘 시행해 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관계를 갖도록 한다.

3. 외국인주민정책

충북에 거주하는 외국인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등록외국인수는 23년 기준 50,352명이다. 미등록외국인수를 포함한다면 그 수는 훨씬 많다.

이제 다문화가족과 달리 외국인부부자녀로 구성된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 가운데 중국동포(조선족), 사할린 동포, 고려인등 재외동포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정착할 수 있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외국인 주민 중도입국자녀나 한국에서 출생한 자녀 특히 청소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외국인 주민 정책에 있었어도 충북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라면 공평한 시민 권리가 부여될 필요가 있다. 또한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지원 특히 청소년(중, 고생)외국인에 대해 더 특별한 관심이 필요로 한다.

- 1) 외국인주민 자녀 전반적인 보육지원 시행
- 2) 외국인주민 자녀 청소년(중, 고생)의 학업과 성장 지원
- 3) 외국인주민 임신, 출산 관련 지원
- 4) 외국인주민 생활정착을 위한 문화지원 - 언어습득
- 5) 외국인정책추진단에 당사자(외국인주민) 채용 및 인력활용

민선 8기 충청도정 평가 토론회 문화분야 토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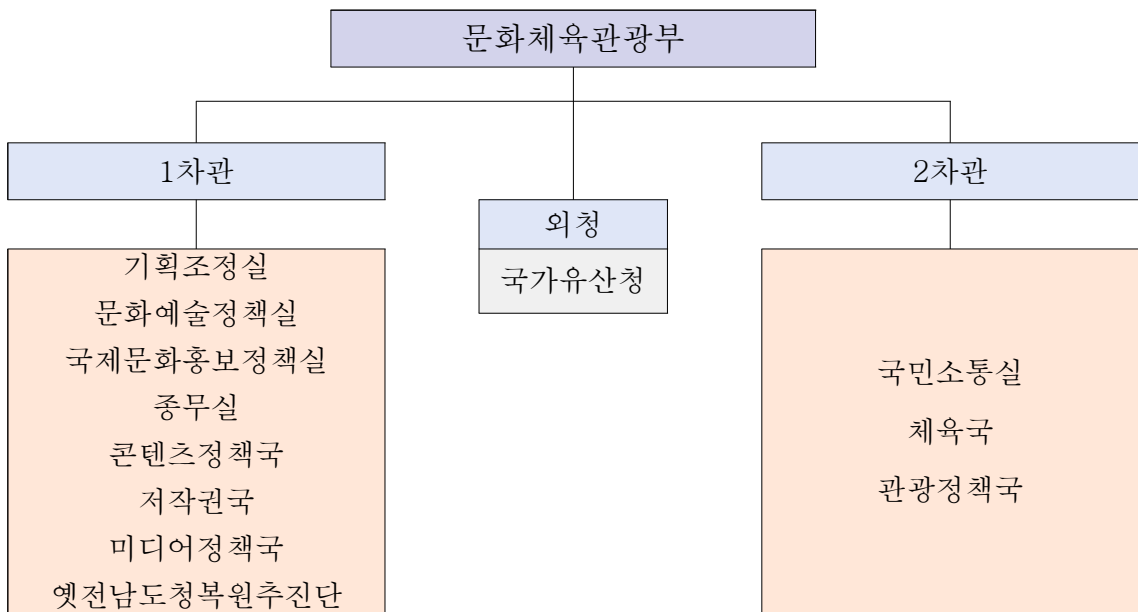
한용진 (사단법인 충북민예총 사무처장)

1. 충청북도 문화예술 행정조직

1) 대한민국 및 충북의 문화행정 체계

대한민국의 문화행정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와 예술 분야 이외에도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행정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024년 현재 1 차관 산하 기획조정실, 문화예술정책실, 국제문화홍보정책실, 종무실, 콘텐츠정책국, 저작권국, 미디어정책국,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이 설치되어 있으며, 2 차관 산하 국민소통실에서 국정홍보 관련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체육국, 관광정책국이 설치되어 있으며 문화재청이 외청으로 설치되어 있다.

<표-1> 대한민국 문화행정 체계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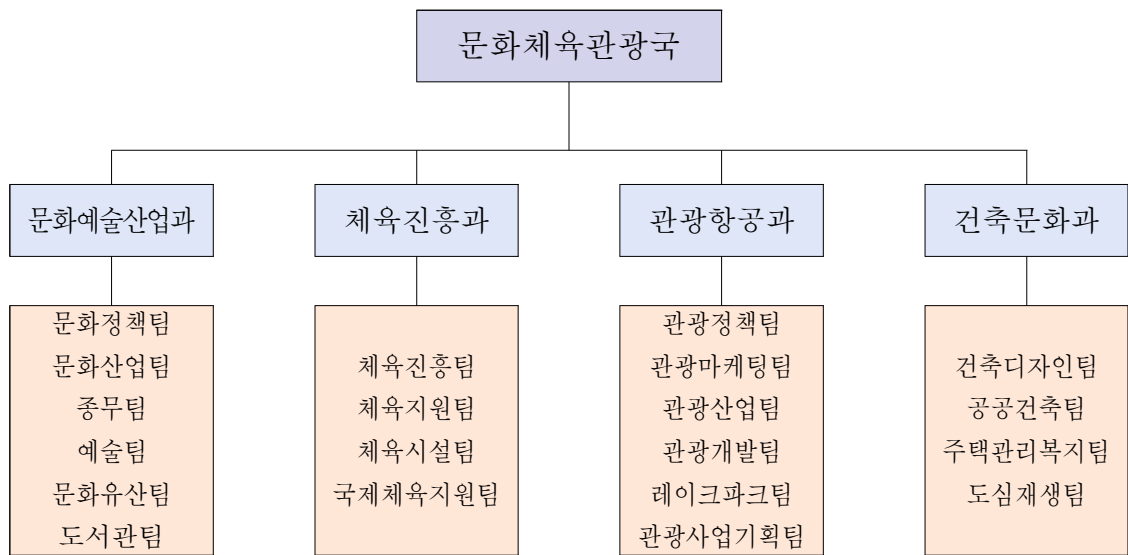


충청북도의 문화행정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국은 중앙정부와 동일하게 문화와 예

11) 2024.03.21.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에서 인용함

술 분야 이외에도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행정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024년 현재 문화예술산업과 산하 문화정책팀, 문화산업팀, 종무팀, 예술팀, 문화유산팀, 도서관팀 등 1과 6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체육진흥과는 체육진흥팀, 체육지원팀, 체육시설팀, 국제체육지원팀 등 1과 4팀, 관광항공과는 관광정책팀, 관광마케팅팀, 관광산업팀, 관광개발팀, 레이크파크팀, 관광산업기획팀 등 1과 6팀, 건축문화과는 건축디자인팀, 공공건축팀, 주택관리복지팀, 도심재생팀 등 1과 4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2> 충청북도 문화행정 체계¹²⁾



대부분 광역지방자치단체 문화행정 체계는 대체로 문화, 체육, 관광의 기능을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국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 문화본부, 부산은 문화체육국, 인천 문화관광국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제주의 경우 지역의 경제 및 산업구조의 특성을 반영하여 해양수산국, 관광국, 문화체육 대외협력국으로 수평적으로 분권화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충청북도의 문화행정체계도 <표-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문화체육관광국을 설치하여 행정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문화재를 전담하는 ‘과’단위의 행정체계가 없는 지역은 충북이 유일하다. 중앙정부의 문화행정체계에서는 문화재청을 외청으로 설치하여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 역시 문화유산과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문화본부에 문화재정책과와 문화재관리과, 강원도는 문화체육국에 문화유산과, 경기도와 경상북도, 전라북도는 문화체육관광국에 문화유산과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문화체육국에 역사문화유산과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전라남도

12) 2024.03.21. 충청도청 홈페이지(www.chungbuk.or.kr)에서 인용함.

는 문화융성국 산하에 문화자원과, 제주도는 해양수산국에 해녀문화유산과를 설치, 운영하는 등 광역지자체 고유의 특성에 적합한 문화유산 관리 행정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2020년 12월 기준 17개 광역지자체 중 충청북도는 문화예술산업과 내 문화재 팀, 대구광역시의 경우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정책과에 문화유산팀이 있으며, 광주광역시 는 문화관광체육실 문화기반조성과에 문화유산팀을 운영했다. 2024년 3월 기준, 광주광역시는 문화체육실에 문화유산지원과, 대구광역시는 문화체육관광국에 문화유산과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청주시도 문화체육관광국에 문화재과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표-2>광역지자체 문화재 현황¹³⁾

(단위: 건, 중목)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전국	
면적		884km ²		501km ²		7,433km ²			
국가 지정 등록 문화재	국보	3	0.9%	2	0.6%	12	3.4%	348	
	보물	77	3.4%	15	0.7%	95	4.3%	2,235	
	사적	9	1.7%	2	0.4%	19	3.7%	519	
	명승	-	-	1	0.9%	10	8.7%	115	
	천연기념물	2	0.4%	2	0.4%	23	5.0%	463	
	국가무형문화재	-	-	1	0.7%	4	2.7%	149	
	국가민속문화재	6	2.0%	3	1.0%	21	6.9%	303	
	소계	97	2.3%	26	0.6%	184	4.5%	4,132	
	국가등록문화재	13	1.5%	21	2.3%	30	3.3%	896	
시도 지정 등록 문화재	시도유형문화재	84	2.2%	31	0.8%	344	8.9%	3,851	
	시도무형문화재	17	3.0%	20	3.5%	27	4.8%	564	
	시도기념물	18	1.0%	24	1.4%	138	8.0%	1,731	
	시도민속문화재	4	0.9%	9	1.9%	20	4.3%	470	
	소계	123	1.9%	84	1.3%	529	8.0%	6,616	
문화재자료	문화재자료		53	1.9%	30	1.1%	92	3.3%	2,807
합계		286	2.0%	161	1.1%	835	5.8%	14,458	

한국의 국가유산청은 외청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한국 사회는 식민지배와 전쟁 그리고 권위주의 통치시대를 거치면서 급격한 근대화, 서구화, 산업화가 진행되었으며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측면보다 전통예술을 보존하고 계승한다는 가치판단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화재청의 독

13) 2020.12.31.기준 문화재청자료 인용

립성을 기반으로 관광 등 다른 분야와 연계와 협업이 가능했으며, 주목할 만한 정책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성공적인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중앙정부의 문화행정체계에서는 국가유산청을 외청으로 설치하여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 역시 문화유산과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문화유산은 매장문화재 및 건축물을 비롯한 미래문화유산을 포함하고 있다. 광역지자체 중 문화재를 전담하는 '과'단위의 행정체계가 없는 지역은 충북이 유일하다. 충청북도의 문화재, 고유예술, 유네스코 등재 세계문화유산 등 풍부한 문화적 전통과 유산은 충북의 강점임을 고려한다면 충북 고유의 콘텐츠 생산을 위한 행정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문화예산과 설치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 중이라 하니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다.

2. 충청북도 문화예산

충북, 충남, 강원은 인구와 면적 등 인구 통계적 특성과 재정자립도 등 재정 규모가 비슷하여 다른 분야에서도 비교 대상이 되기도 하며, 충남과 충북인 면적이 상대적으로 유사하며, 인구는 강원과 유사하다. 2024년 일반회계 본예산 규모는 충남 8조 8,340억 원, 강원 6조 7,975 억 원, 충북 6조 4,289억 원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30% 내외로 유사하다. 충청북도의 문화예술예산은 다른 강원과 유사하지만 충남에 비해 금액과 비율 면에서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3> 광역 지자체 문화예산 비표(2024년 본예산 기준)

(단위:억원)

	충청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인구	159.3	만 명	213	만 명	152.7	만 명
면적	7,433	㎢	8,204	㎢	16,875	㎢
본예산 일반회계	6조 4,298 억 원		8조 8,340 억 원		6조 7,975 억 원	
재정자립도 (2023년 기준)	30.47%		33.6%		29.4%	
문화및관광 (기능별)	1,888.9억 원	2.94%	4,333.5	4.91%	3,164억 원	4.17%
문화예술	507.4억 원	0.79%	2352.5억 원	2.66%	684.7억 원	0.90%
관광	315.7억 원	0.49%	628.2억 원	0.71%	825.8억 원	1.09%
체육	735.3억 원	1.14%	1352.8억 원	1.53%	1293.1억 원	1.70%
문화재	330.4억 원	0.51%			360억 원	0.47%
문화체육관광 (조직별)	2,835.3억 원	4.41%	4404.6억 원	4.44%	2185.9억 원	2.28%
	문화예술산업과	1.30%	문화정책과	1.02%	문화예술과	0.83%

	(838.7억 원)		(1013.8억 원)		(628.5억 원)	
			문화유산과 (1592.7억 원)	1.61%	문화유산과 (412.6억 원)	0.54%
	체육진흥과 (735.7억 원)	1.14%	체육진흥과 (1359.4억 원)	1.37%	체육과 (1077.9억 원)	1.42%
	관광과 (211억 원)	0.33%	관광 진흥과 438.6억 원	0.44%		
	건축문화과 (1049.6억 원)	1.63%			올림픽지원과 66.7억 원	0.09%

자료: 2023년 12월 31일 기준 통계청 자료 참조
2024년 지자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본예산 일반회계 참조
각 지자체 2023년 재정공시 참조

<표-4> 충청북도 문화예산 (최근 3년간 일반회계 본예산 기준)

	2022년		2023년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	5조 5,119억 원		5조 9,596억 원		6조 4,298억 원	
문화및관광 (기능별)	2184.6억 원 186.5억 원	3.96% 9.34%	2,044.7억 원 △140.5억 원	3.43% △6.4%	1,888.9억 원 △155.7억 원	2.94% △7.62%
문화예술 (전년대비)	624.2억 원 131.3억 원	1.13% 26.65%	624.8억 원 0.5억	1.05% 0.09%	507.4억 원 △113.5억 원	0.79% △18.28%
관광 (전년대비)	301.9억 원 34억 원	0.55% 12.73%	306.6억 원 4.6억 원	0.51% 1.55%	315.7억 원 9억 원	0.49% 2.96%
체육 (전년대비)	918.3억 원 △17.3억 원	1.67% △1.85	801.1억 원 △117.8억 원	1.34% △12.83%	735.3억 원 △65.7억 원	1.14% △8.2%
문화재 (전년대비)	340억 원 38.4억 원	0.62% 12.74%	312.1억 원 △27.9억 원	0.52% △8.21%	330.4억 원 14.4억 원	0.51% 4.56%
문화체육관광 (조직별) (전년대비)	3,286.9억 원 449.1억 원	5.96% 15.83%	2,882.6억 원 △398.4억 원	△4.84% △12.15%	2,835.3억 원 △472.6억 원	4.41% △1.64%
문화예술산업과 (전년대비)	965.3억 원 169.7억 원	1.75% 21.34%	937.9억 원 △27.3억 원	1.57% △2.84%	838.7억 원 △99.1억 원	1.30% △10.58%
체육진흥과	918.7억 원	1.67%	801.5억 원	1.34%	735.7억 원	1.14%

(전년대비)	2.5억 원	0.28%	△117.9억 원	△12.82%	△65.7억 원	△8.20%
관광(항공)과 (전년대비)	228.4억 원 △5.5억 원	0.41% △2.38%	160.1억 원 △61.8억 원	0.27% △27.87%	211억 원 50.9억 원	0.33% 31.84
건축문화과 (전년대비)	1,174.3억 원 282.3억 원	2.13% 31.66%	982.9억 원 △191.3억 원	1.65% △16.29%	1049.6억 원 66.7억 원	1.63% 6.79%

자료: 2023년 12월 31일 기준 통계청 자료

022년~2024년 충청북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본예산 일반회계 참조

충북의 본예산 일반회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문화예술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문화예산의 경우 경제적 효율성을 측정하기 어려운 문화 분야의 특성상 지자체로 포괄적 재원 이전이 되더라도 지역의 우선 현안, 지자체의 재정여건, 자치단체장의 성향 등의 변수에 따라 지역 문화사업, 특히 기초순수예술 창작지원 예산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충북의 문화예술 육성지원 사업은 창작활동 및 연구지원 등 향유기회를 생산하는 과정보다는 각종 축제, 예술제, 경연 대회 지원 등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는 결과물 중심의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충청북도 문화예술정책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정책의 성과효율성을 중심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경제적 효율성을 측정하기 어려운 문화예술 분야의 특성상 지역의 우선 현안, 지자체의 재정여건, 자치단체장의 성향 등의 변수에 따라 지역 문화사업, 특히 기초순수예술 창작지원 예산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그 결과 예술생태계의 분화와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이 투입되지 않고 있다.

창작 결과물 중심의 지원방식과 함께 창작물의 유통과 보급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확장하는 등 결과물 생산 중심의 지원구조에서 성장할 수 있는 과정 중심의 지원으로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환경구축과 문화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정의 지속적 확충이 필요하다.

문화유산팀을 문화유산과 확대하는 등 문화예술 행정조직 개편과 그에 따른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필요하다. 충청북도 문화예술정책의 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론화 과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의회의 입법 활동을 통한 법적 제도적 보장을 통해 안정적인 정책집행 구조를 마련하고 일관성 있는 충청북도의 문화행정이 지속되어야 한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민선 8기 충북도정 2년, 성과와 과제

발행일 2024. 6. 19.

발행처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연구센터(센터장 : 정상호)

연락처 043-267-0151 cbcitizen@hanmail.net

※본 자료는 충북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보조금 0%, 회원 회비와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043-267-0151 **홈페이지** www.citizen.or.kr

주소 28537 충북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1 (우암동)